

뉴욕 기후민중행진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출장 보고서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수력원자력노조/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목차

1. 회의 개요 및 참가자 -----	1
2. 참가기 -----	4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결성과 기후민중행진의 배경 (임월산)	4
출장 준비과정, 전체 일정 및 약평 (구준모)	8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전략 토론 (신현규)	13
기후민중행진 참가기 (소연섭)	18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간담회 (이인희)	21
TUED 교육 활성화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 (이종훈)	25
3. 회의 및 간담회 내용 -----	32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세션 1> 기후변화 전략 토론	32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세션 2> 에너지의 사회적 소유 방안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	37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세션 3> TUED 발전 방향 토론	49
9월 20일 국제공공노련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 간담회	56
9월 22일 TUED 연구교육 사업 토론	60
9월 22일 TUED 코디네이터 손 스위니 간담회	65
4. 기후변화와 총체적 무대응 : 노동조합의 새로운 관점 -----	68
5. 한국 참가단 발표 자료 -----	93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경험과 과제	93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노동조합의 활동	98

1. 회의 개요 및 참가자

» 전체 일정

일시	행사	주요 내용
9월 19일(금)	뉴욕 도착, 점검 회의	
9월 20일(토)	TUED 전략 워크숍: 민중에게 권력을	<세션 1> 기후변화 전략 토론
		<세션 2> 에너지의 사회적 소유 방안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
	PSI 간담회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	한국 민영화 현황과 협력 방안
9월 21일(일)	기후민중행진	노조 참가단과 함께 집회 후 행진
	세월호 집회	한국영사관 앞 집회 후 유엔 본부까지 행진
9월 22일(월)	TUED 연구교육 사업 토론	교육 사업의 사례 소개 및 필요한 교육 자료 토론
	TUED 간담회 (손 스위니 교수)	한국 에너지 전환의 이슈,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조합의 과제, 협력 방안
	세월호 집회	박근혜 대통령 숙소 앞 규탄 시위
9월 23일(화)	노동조합 리셉션	행진에 대한 평가, 각국 참가자 발언, 결의
	세월호 집회	유엔 본부 근방 규탄 시위

» 참가자

Argentina CTA International: Maite Llanos

Brazil CUT: Vania Viana

Brazil CUT: Carmen Foro

Canada CLC: Hassan Yussuf

Canada CLC: Donald LaFleur

Canada CUPE: Charles Fleury

Canada CUPE: Graham Cox
Canada CUPE: Michael Butler
Canada UNIFOR: Patty Barrera
Canada UNIFOR: Sari Sairanen
Canada UNIFOR: Jerry Diaz
Canada CSN-Quebec: Nathalie Guay
Canada FTQ-Quebec: Johanne Deschamps
India NTUI: Susana Barria
India NTUI: Ashim Roy
Norway NUMGE: Asbjorn Wahl
Norway NUMGE: Gunnar Steinsholt
Peru FENTAP: Dante Alfaro
Philippines SENTRO: Josua Mata
South Africa COSATU: Khwezilomso Mabasa
Trinidad and Tobago OWTU: Peter Burke
Trinidad and Tobago OWTU: Roger Stewart
UK GMB: Bert Schouwenburg
UK GMB: Jim McPherson
UK PCS: Chris Baugh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ITF: David Hansen-Miller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Rosa Pavanell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David Boys
PSIRU - Africa PSIRU: Sandra Van Niekerk
Sustainlabour Foundation SLF: Laura Martin Murillo
US 1199 SEIU: Estela Vasquez, James Johnson
US 32BJ SEIU: Lenore Friedlaender, Bill Aristovulos
US Amalgamated Transit Union: Bruce Hamilton
US Local 3, IBEW: Michael Yee, Humberto Restrepo
US National Nurses United: Fernando Losada
US NY State Nurses Association: Judy Gonzalez, Jill Furillo, Sean Petty
US United Auto Workers: Julie Kushner
US Movement Generation Justice & Ecology Project: Brooke Anderson
US Blue Green Alliance: Michael Williams

US Center for Wisconsin Strategies: Sarah L. White

US Sierra Club Labor Programs: Dean Hubbard

US National Guest Workers Alliance: Saket Soni

» 한국 참기단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소연섭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사무처장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인희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2. 참가기

》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결성과 기후민중행진의 배경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1. 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네트워크

1) 개요

- 조직명: 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TUED)(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네트워크)
- 결성: 2012년 10월
- 제안자: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 세계노동연구소(Global Labor Institute) 및 노동자연구소(Worker Institute),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뉴욕사무소(Rosa Luxemburg Foundation-NY)
- 코디네이터: 쉰 스위니(Sean Sweeney) 코넬대학교 교수
- 홈페이지 <http://www.energydemocracyinitiative.org/>

2) 배경 및 취지

- 미국 뉴욕 코넬대학교 글로벌노동연구소의 제안으로 2012년 10월 ‘에너지민주주의’ 주제로 노동조합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이 자리에서 민영화, 환경위기, 에너지빈곤 등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참가자들이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결성에 결의했음.
- 홈페이지 소개글에 따르면 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네트워크는 환경위기, 에너지빈

곤, 자연의 파괴, 민중의 빈곤화와 노동권에 대한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적 에너지 통제와 사용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결성된 세계 다부문(multi-sector) 프로젝트임.

○ 네트워크의 주요 목표

- 에너지 민주주의를 모색하기 위한 세계 노동조합 간 소통과 교류: TUED는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모색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노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임.
- 조사연구사업, 교육자료 개발, 온라인 소식지 배포 및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에너지, 환경 문제 관련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입장을 개발.
- 조합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하고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강화하도록 에너지민주주의 의제를 노동조합의 현장투쟁과 캠페인에 연결.

3) 참가 조직

○ 2014년 9월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한국,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남아공, 러시아,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미국 등 15개국 40여개 노동조합.

○ 국제교육노련(EI), 국제식품노련(IUF),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공공노련(PSI) 등 4개 국제산별연맹

○ 아르헨티나(CTA), 한국(KCTU), 필리핀(SENTRO), 캐나다(CTU) 등 4개국 노총

○ 글로벌 노동연구소 네트워크(GLI),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등 노동연구기관

4) 주요 활동

○ 지난 2년 동안 TUED는 3차례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했고, <저항하라, 탈환하라, 재건하라: 노동조합과 에너지 민주주의 투쟁>, <세계의 셰일가스와 수압파쇄 반대운동> 등 여러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뉴욕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에너지민주주의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를 제작 중이며 에너지민주주의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2년간의 활동을 통해, 미국노동운동의 에너지민주주의와 기후정의 운동을 촉발시켰고 국제노동운동 내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에너지의 공공소유 및 민주적 통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었음.

2. 기후민중행진(People's Climate March)과 TUED 행사 참가 취지

1) 배경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소집으로 2014년 9월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음. 반기문 사무총장은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0)를 앞두고 정상회의를 통해서 침체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협약 논의를 위한 모멘텀을 형성하겠다고 발표했음.

○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환경·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진정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촉구하기 위한 '기후정의 민중행진'과 여러 부대행사를 조직하였음.

○ TUED는 기후정의 행진에 대한 미국과 해외 노동조합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조직했음. 또한 기후정상회의 기간에 맞추어 내부 전략워크숍을 비롯해 여러 행사를 개최했음.

- 9월 민중행진과 부대행사를 TUED는 에너지민주주의의 개념을 소개하고 각국 노동조합의 에너지 공공성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투쟁을 결합시킬 수 있는 위한 연결거리를 모색하였음.

○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정세 및 에너지민주주의의 개념과 관련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TUED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및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참가단을 구성하여 4일간 기후정의행진 및 TUED 행사에 참가했음.

2) 참가 목표

- 한국 노동조합의 에너지 민영화 저지 투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해외노조와 투쟁 경험 교류
- 에너지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한국 적용방안 모색. TUED 사업 참가방안 모색.
- 세계 에너지산업 민영화,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기후변화 대응 등 관련 동향 파악



》 출장 준비과정, 전체 일정 및 약평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1. 준비 과정

2013년 TUED 연례회의에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와 임월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국장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올해 회의에도 TUED로부터 한국측 참가를 제안 받았는데, 작년과 달리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개적으로 참가단을 모집했다.

참가단을 공개 모집한 이유는 TUED 연례회의와 기후민중행진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에서 다소 침체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다시금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참가단 모집은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와 한국발전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지

부, 한국수력원자력노조가 함께하게 되었다.

참가단은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 에너지 민주주의와 기후변화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첫 번째 워크숍(8월 5일, 발전노조)에서는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기후변화 국제회의 동향을 브리핑하고, TUED의 입장 문서인 <저항하라, 탈환하라, 재건하라>를 검토했다. 두 번째 워크숍(9월 5일, 공공운수노조)에서는 2010년 공공운수노조가 발간한 <기후변화협약과 노동조합의 과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번역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신화 깨기>, <세계의 셰일가스 수압파쇄 반대 운동>을 검토했다.

그리고 한국 측의 발표 문서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경험과 과제>,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노동조합 활동>을 작성하고 번역했다. 비록 현지에서 행사가 변경되어서 발표문을 널리 활용하지는 못하고, 간담회에서 활용되었지만 내부 워크숍 및 발표문 준비 과정은 교육 과정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9월 18일에는 출장을 앞두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기후정의연대가 '기후정의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아주 오랜만에 공동 토론 자리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뉴욕 출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쟁점에 대한 초별적인 논의가 되었고, 향후 이런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2. 참가단 전체 일정

일시	행사	주요 내용
9월 19일(금)	뉴욕 도착, 점검 회의	
9월 20일(토)	TUED 전략 워크숍: 민중에게 권력을	<세션 1> 기후변화 전략 토론
		<세션 2> 에너지의 사회적 소유 방안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
		<세션 3> TUED 발전 방향 토론
	PSI 간담회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	한국 민영화 현황과 협력 방안
9월 21일(일)	기후민중행진	노조 참가단과 함께 집회 후 행진

	세월호 집회	한국영사관 앞 집회 후 유엔 본부까지 행진
9월 22일(월)	TUED 연구교육 사업 토론	교육 사업의 사례 소개 및 필요한 교육 자료 토론
	TUED 간담회 (손 스위니 교수)	한국 에너지 전환의 이슈,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조합의 과제, 협력 방안
	세월호 집회	박근혜 대통령 숙소 앞 규탄 시위
9월 23일(화)	노동조합 리셉션	행진에 대한 평가, 각국 참가자 발언, 결의
	세월호 집회	유엔 본부 근방 규탄 시위

3. 전체적인 평가

1) 새로운 전략 모색

이번 출장을 통해서 세계의 노동조합과 기후운동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TUED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토론은 20년간 이루어졌던 노조의 기후변화 대응이 실패했고, 이제는 근본적인 사회변화와 결합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때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TUED의 기후변화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녹색경제의 활성화를 제시하는 프레임을 명시적으로 비판한다.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이들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규제 정책과 시장 정책은 기업의 권력과 통제력에 맞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노동조합 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제운수노련, 국제건설노련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2012년 리우+20에서 노동조합 회의가 발표한 성명에는 현재의 경제 체제가 바뀌어야 하고, 민중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TUED 전략 토론에 참가한 북반구나 남반구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기후변화를 외재적인 환경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사회 권력과 평등에 관한 문제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로비보다는 변화를 위

한 세력을 형성하고 투쟁을 통해 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특히 한 남반구의 참가자는 노동권 방어와 민영화 저지 투쟁에 많은 힘을 쏟고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노조의 자원을 배치하기 힘들지만, 기후변화와 이러한 투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같이 싸워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2) TUED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TUED는 1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작년에도 회의에 참가한 임월산 동지에 따르면 참가 노조와 회의 참가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TUED 회의에서 아주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분출되었다. 그만큼 TUED의 성과가 긍정적이고 그에 따라 높아진 기대를 보여주었다.

특히 TUED 사무국이 뉴욕의 간호사노조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사업의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뉴욕 간호사노조와 SEIU 등은 회의에도 적극적이었고 기후민중행진에도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가하여 매우 활발하게 진행했다.

다만 세계 노동조합들의 네트워크인 TUED가 연구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투쟁과 사업 기획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보고서를 생산하고 노동조합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까지 TUED의 역할이었다면, 아르헨티나에서 온 활동가는 내년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바라보면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TUED 내에서 남반구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문제였다. TUED의 사무국은 뉴욕에 있고, 북반구의 연구자나 노조 정책전문가의 토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남미쪽 노조 활동가들은 TUED가 북반구 인사들에 의해 그들의 이슈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약간의 불만이 존재했다. 또한 영어로 작성된 연구 자료 및 교육 자료의 번역도 중요한 이슈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TUED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남반구 노조들의 토론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민되었다.

3) 세월호 투쟁

한국 참가단은 기후정상회의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들과 사회운동의 요구를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해외에서 세월호 투쟁을 이슈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참가단은 세월호 시위를 위한 영문 손피켓, 세월호 추모 목걸이와 리본을 한국에서 준비해갔다. 9월 21일(일) 뉴욕 한국영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400여 명의 교민들이 참가했다. 뉴욕에서 열린 한인 집회로는 아주 큰 규모라고 했다. 집회 마무리 발언으로 한국 참가단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공공기관 정상화, 민영화 공세를 펼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2일(화)과 23일(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숙소와 유엔 본부 근처에서 규탄 투쟁을 이어갔다.



》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전략 토론회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TUED 전략 토론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노동조합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회였다.

1. 기후변화에 관한 노동조합의 새로운 접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TUED의 이슈페이퍼 초안에 대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이 이슈페이퍼 <기후변화에 대한 완전한 무대응: 노동조합의 새로운 관점>은 번역되어 보고서에 실을 예정이다.

1)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온 노르웨이의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아스빅은 발은 보고서가 비판적이지만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고서에 담긴 비판은

세 가지 차원이라고 보았다.

첫 번째는 정책적 차원이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녹색성장, 녹색시장, 녹색경제에 파트너로 참여하려고 했다. 시장의 논리를 활용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모색한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방식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사회적 요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패했다. 이제는 로비보다는 투쟁에 더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 차원이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같이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단일한 이슈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 경제위기, 불평등, 실업 등에 같이 대응하고 다양한 의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세 번째는 방법론적 차원이다. 지난 20년 동안 로비 활동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역사의 교훈을 얻어서 로비는 투쟁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힘이 충분히 강할 때만이 로비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 우리의 권력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온 필리핀의 조슈아는 우리의 힘(권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에 하이엔 태풍으로 필리핀은 큰 고통을 겪었다. 필리핀은 이미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필리핀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60명의 노조 간부들이 살해당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이 크지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커다란 적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욕심이 있다. 필리핀 노동운동 사회운동 특히 청년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문제는 이것이 우리 목표이고 요구인데 그것을 달성할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이 에너지 민주주의는 필리핀에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민영화 저지 투쟁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민영화 반대 투쟁 최근에 성과가 있었다. 작년에 민영화 반대 여론 확대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큰 성과이다. 한 지역에서 민영화 여론조사 했는데 반대 여론이 확대되었다.

필리핀 노조 급진주의 전통에서 체제 변화의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쉽다. 기후변화 대응은 FTA와 연결된 문제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더 큰 의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에너지의 사회적 소유에 관한 토론

TUED는 PSI와 함께 에너지의 사회적 소유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 중간보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1)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한계

먼저 연구진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생기고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 흥미로운 세 가지 사례가 소개되었다. 세 가지는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 시작된 사례, 캐나다 퀘벡의 발레오 협동조합 사례, 덴마크 코펜하겐 협동조합의 사례였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캐나다 공공노조(CUPE)의 그레이엄 콕스는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서 협동조합을 위해 시장을 열어줬는데 협동조합은 역할이 적고 다른 기업이 참여하여 훨씬 더 시장화되었다. 그는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가 시장화와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공기업이 제외되어 있는데, 나프타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국유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략과 전술을 혼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은 전술이라고 했다. 벌써 민영화된 상황이면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대

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기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캐나다를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다양한 방식의 재국유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게 노조와 지역사회단체들이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결론지었다.

2) 지방정부로의 재공영화

재공영화 연구는 재공영화 할 때 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노동조합 대표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재공영화에 대한 두 가지 사례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서부의 중간 규모 도시인 볼더의 사례이다. 볼더의 환경단체가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예스 재국유화 예스’ 연대체를 결성했다. 연대체가 요구한 것은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이었다. 바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하는 것 아니었다. 주민투표 제기해서 주민투표 통과되어서 재공영화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될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두 번째는 독일 베를린의 사례다.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에서 재국유화 요구했다. 재공영화 대상도 훨씬 컸다. 환경적 사회적 목표가 뚜렷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고 민주적인 운영도 중요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 투표를 통해서 이사회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전력요금 누진세 형태로 책정하는 것, 전기를 활용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정한 전력 사용량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 검토했다. 민간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승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도 정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투표율이 저조해서, 투표자는 다수 찬성했지만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

지정토론자인 PSI 연구소의 산드라 반 니커크는 지역사회 소유인가, 중앙정부 소유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이 둘 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보다 잠재력이 훨씬 더 크지만, 재생에너지에 민간이 참여하면 그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후민중행진(People' s Climate March) 참가기

소연섭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사무처장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소집으로 2014. 9. 23(화) 뉴욕 유엔에서 유엔 기후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2014. 9. 21(일) 미국의 간호사 노조 조합원 등 많은 노동조합과 세계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참가자, 시민단체 및 시민들 등 약40만이 각 조직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리허설을 시작으로 본 행사를 시작 기후변화 대책 촉구, 지구 온난화 방지, 인류가 만들어내는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한다고 연사들마다 절규의 외침을 진행하였고, 이후 콜롬버스 서클에서 유엔 본부를 향해 대규모 행진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카트라나

(2005년), 아리린(1999년)을 넘어 역대 허리케인 가운데 2012년 24년 만에 최대 규모인 “샌디”의 영향이라고 한다. 1,000만 명 이상이 정전으로 며칠간의 불편을 겪었고, 병원의 수많은 환자들을 간호사들이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 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재앙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 온다는 것을 알고서, 병원에 종사했던 간호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시작 되었다.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필수재를 생산을 당장은 중단 할 수 없지만, CO2 등 환경, 기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친환경, 자연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하고, 지구 온난화로 온도 1°C 상승시 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 내려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아래로부터 위로 국제노조연맹을 움직일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와 투쟁, 조합원의 교육을 통하여 관심과 참여가 절실 한 시가라 한다.

세계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는 로자록셈부르크재단의 지원으로 세계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를 구성 기후변화 대응 및 전 세계 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교육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언어 장벽의 번역 등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고민과 로자록셈부르크재단의 지원만으로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에 재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세계 많은 노조들의 동참이 필요 하다고 한다.

기후변화 대책 촉구 및 민중행진은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세계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아주 대규모 민중행진 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집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인파가 4시간의 집회 시간에 2시간 리허설과 연사들의 연설시간에도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진행되고 각종 유인물들로 거리가 쓰레기장으로 변화지도 않고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2시간 가량 행진을 하면서 행진자체를 즐기는 축제 분위기로 진행 되었고, 중간 중간 공연과 이벤트로 행진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시민들도 창문을 열고 행진하는 군중들을 지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폴리스라인 또한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수많은 군중들의 민중행진은 질서를 잘 지키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세계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참가자 및 시민들이 함께한 기후변화 대책 촉구와 민중행진의 결과물들이 세계 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결의와 다짐이 아래서부터 위로 전달되어 기후변화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일에 관심과 실천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 국제공공노련(PSI),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간담회

이인희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1. 서두

이번에 에너지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다녀온 뉴욕기후민중행진은 에너지노조의 활동가 중 한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많은 고민 그리고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된 의미있는 출장이었다. 기후온난화와 관련한 것이 화두였지만 기후온난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에너지문제를 전 세계 노동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전 세계의 정세와 흐름 속에서 우리 무엇을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본 값진 시간이었다. 따라서, 간담회내용과 느낀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를 정리해 본다.

2. PSI 및 TUED 간담회

국제공공노련(PSI)이라는 방대한 성격에서 그리고 미국의 노동운동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으며, 크게 주목할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TUED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노동운동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고 최근의 한국의 노동운동의 경향을 고려하며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에노사처럼 정책기능에만 머물고 있지만, 회원국의 토론회에서 보여 준 조직화의 필요성을 들으며, 실리주의에 머물지 않고 변혁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각국 활동가를 볼 수 있었다. 아직은 TUED 스스로가 그 한계를 지적하긴 했지만...

TUED도 공식적으로 변혁적 운동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민주주의”란 화두를 던짐으로 해서 그 길을 내심 찾는 듯 보였다. 총연맹을 의식하면서...

결국 고민의 끝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자본의 실체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답을 찾기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노사’는 ‘TUED’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노동과 환경 그리고 시민을 접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 노동자들과 소통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에너지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을 모색하며 조합원의 생각이 변혁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 가짜 정상화도 전 세계 및 국내의 장기 경제 불황 및 공황의 예고 속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진행되고 있음은 많은 활동가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UED 가입 노동조합들이 ‘에너지 민주주의’와 관련한 토론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한계와 비판이 있었고, 향 후에는 투쟁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공통적 의견을 보면 이에

대한 이해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선진자본국(북반구)과 후진국 및 개도국(남반구)사이에 그 농도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에너지 노동자의 흐름 속에서 방어적인 운동으로 인한 노동운동의 패배(?) 보다는 적극적으로 철학적 담론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담을 조직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4. 소견 : 마지막으로 제가 출장기간동안 고민한 내용을 어설피게 나열해 본다. 마지막 일정이었던 평가회 및 뒤풀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초로.

1) 전 지구적 현상

“ 자본이 환경을 죽이고, 노동자를 죽이고, 에너지 전쟁을 일으킨다 ”

- 이윤생산체제는 필히 환경의 파괴를 심대하게 야기한다. (환경)
- 이윤생산의 도구로 에너지를 사유화할 때, 노동자를 구조조정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속성상 필연이다. (사회공공성)
- 국제적인 헤게모니 장악의 경쟁 속에서 에너지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 전쟁을 일으켜 많은 민중의 생명을 앗아간다. (전쟁반대)

2) 전 세계 에너지 노동자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향해 나아가야할 방향

- 아직 노동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 안에서 개별 기업 이익을 중심으로 노동의 대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과 정권이 에너지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서 정도 반응하고 투쟁하는 정도이다.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조차도 각개격파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에너지노동자가 지향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여 실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조합원을 변혁적으로 견인할 방향이 찾고 교육도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가. 에너지는 자연과 같이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회성(사회적 소유)
- 나. 에너지 노동자간 전 지구적 에너지원의 안배에 대해 생산주체로서 상호 교류 및 대안모색, 그리고 정책요구(경쟁적 구도 해체)
- 다. 에너지 생산주체로서 친환경적 에너지원을 주도적으로 정책요구(공공의 틀 강화)
- 라. 부유한 자에게는 비싼 부담을 가난한 자에게는 경감을 쓰러진 자에게는 무상 공급의 방향 제시(사회성에 기초한 부담체계 제시)
- 마. 제국주의적 에너지원확보를 위한 전쟁반대, 후진국의 경제적 침략 반대
(제국주의적 전쟁반대)

3) 민간에너지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에너지산별 건설 모색

- 모든 일을 하려면 추진체가 필요하고 이를 담아낼 용기(조직)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조심스럽게 에너지 산별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노동자와 함께 연대할 고민을 해 보자. 이와 함께 에너지 산별 속에 충분한 연구기금의 조성으로 전 지구적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정책기능을 강화하자.



》 TUED 교육 활성화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



1.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4. 9. 22(월) 11:30~13:30
 - ※ 손 스위니 교수와 한국 참가단 간담회(13:30~14:30)
- 장소 :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뉴욕사무소
- 참석인원 : 25명
 - 코넬대 세계노동자연구소(손 스위니 교수)와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 PSI, ITF 등 국제 노련
 - 북반구를 대표하는 미국, 영국, 핀란드 공공부문 노조
 - 남반구를 대표하는 필리핀, 인도,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조
 - 한국 참가단

- 주요 의제
 -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노조의 관심과 실천을 제고시킬 수 있는 TUED 교육 활성화 방안
 - 에너지 민주주의와 관련한 노조들의 구체적 요구사항(남반구 노조 중심)
 - TUED의 정체성 및 지속 가능성과 향후 발전방향

2. 교육 활성화 관련 토론 내용

▶ 주최 측 요구사항 및 입장

- 에너지 민주주의 관련 노조 입장에서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특히 남반구 노조 입장에서)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대상(지도부, 평조합원, 공통 등)을 구분할 필요성 제기
- TUED을 소개하는 교육자료 준비 중
- 2년 전 뉴욕을 강타한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생명 구호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노조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TUED의 선 스위니 교수가 간호사 노조에 대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 TUED에서는 소개 자료와 함께 연구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국제노련 및 북반구 노조의 입장

- 수압 파쇄에 관한 보고서 등 TUED에서 발표하는 연구조사보고서가 조합 내 토론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된 것처럼 기후변화가 왜 노조의 문제인지를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됨
- 현재 지도부가 필요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에너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교육 자료임

- 지도부와 조합원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 자료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할 것인지,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교육자료의 핵심은 기후변화 투쟁과 사회적 투쟁의 결합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 자료가 요구되며, 가급적 높은 수준의 내용에 집중하는 자료가 요구됨

※ 북반구 노조들은 상대적으로 TUED의 정책적 활동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TUED의 수압파쇄의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폐해 및 재공영화에 대한 연구조사보고서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 남반구 노조의 입장

- TUED에 대한 소개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북반구와 남반구는 개념과 운동양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

- 남반구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교육 자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TUED이 운동을 중심에 두고 노조를 조직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한 교육 자료도 필요함

- 남반구에 몰아치는 민영화에 대응하려면 노조 차원에서의 대응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제시하는 교육 자료가 필요함

- 현재 TUED의 교육 자료는 북반구 중심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중요한 의제들을 포함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며, 협상 중심의 내부 전략수립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사회운동과 연대를 건설하는 외부 실천운동이 필요함

- 남미노조연맹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새로운 강령에 포함시키고 가맹조직 교육 중

-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는 홍보물은 포스터나 만화와 같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주기를 바람

※ 남반구 노조들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확산 등으로 노조간 연대 및 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노조의 네트워크로서 TUED의 역할을 강조하며 어려운 남반구 투쟁을 지원하고 조직할 것을 기대함

▶ 한국 참가단의 의견

•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은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시장화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으며, 10년이 넘는 민영화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민영화 문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TUED 차원에서 민영화가 진행되었던 국가의 피해 사례와 최근에 진행되는 재공영화 사례,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민영화 사례 등을 정리하여 자료화 하면 한국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TUED의 성격과 향후 발전방향

▶ 주최측 입장

• 로자룩셈부르크 재단과 노조에서 재정을 후원하고 있지만, 현재 상근자 두 명이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안된 많은 것들을 하려면 노조의 적극적 재정 후원이 절실함

• 12월에 열리는 리마 기후변화협약에 TUED의 내용이 국제노총의 성명서에 포함된다고 해도 바로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내용이 실천적 정책이 되도록 다층적인 노조 차원에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TUED이 운동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한계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연구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자원이 필요하며, 노조가 정책 생산물을 가져가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대응 활동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유엔 기구에 자금을 의존하게 되면 보수화되는 경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련들과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토론하는 게 필요함

▶ 참가단 입장

- 북반구, 남반구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TUED의 지속성을 바라면서도 TUED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반구 노조들과 PSI, ITF 등 국제노련은 셴 스위니 교수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TUED의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집중해야 하고 각종 국제노련에서 TUED의 정책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함

- 남반구 노조들은 공통적으로 TUED의 정책사업이 북반구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면 남반구의 특수 상황을 포함한 정책의제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TUED의 근본적인 성격과 역할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민영화와 같이 현안이 걸려 있는 국가들(페루, 필리핀 등)은 TUED의 직접적인 지원과 사회 연대 전략 수립과 같은 포괄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반면,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의 노조들은 남반구의 노조 연단체 등과의 TUED를 정책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함

- 현재 TUED는 연구소 성격이 여전히 강하지만, 네트워크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국제노총을 포함한 각종 국제노련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재정 후원 확대와 함께 정책의제의 채택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임

4. 맺으며

환경과 에너지, 10년 넘게 갈등과 불편한 연대를 넘나들고 있다. 시장을 중심에 두는 환경단체들이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에너지 노조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에너지 노조들이 기후변화에 실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산업, 특히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노동자들은 기

후변화에 있어 생존권과 정의로운 기후전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여야만 할까?

이번 뉴욕 행은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온 TUED의 ‘저항하라, 탈환하라, 재건하라’는 슬로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에너지 공공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보다 확장되고 실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TUED이 국내 노동계에 시사하는 가장 큰 매력은 기후변화와 민영화 문제를 접목시켜 에너지 노동자들을 정의로운 기후전환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고민은 에너지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과 에너지 노조를 넘어서는 노동운동과 사회 연대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번 뉴욕 출장은 크게 TUED에서 주관하는 전략/교육 토론과 참가단위 간담회, UN 기후정상회의에 맞춘 기후민중행진, 그리고 UN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에 맞선 교민 집회에 결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TUED 토론회는 현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참석자들의 토론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남반구에서 참가한 노조들이 TUED를 통한 지원을 받아내고, 자신들의 현안을 전세계 노조들에게 알려내기 위한 열정은 숙연함마저 들게 한다. 페루의 물 민영화와 필리핀 민영화 저지 투쟁이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도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민영화 투쟁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북반구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분산형 에너지체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TUED에서 연구조사 중인데, 골자는 협동조합 방식이 시장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공영화를 정책과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듯 연구소로서,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TUED의 확장 가능성은 크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션 스위니 교수는 회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자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참가 단위들은 국제 노총과 국제 노련, 그리고 국가별 총연맹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동의를 모았다. 물론 한국 참가단도 산별 연맹과 총연맹에 재정 지원을 요구해 보겠다는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9월 21일 개최된 기후민중행진에는 40만 명이 참가하여 뉴욕 시위 역사상 가장 대규모 시위였다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참가단은 TUED를 중심으로 PSI 가맹조직, 미국의 SEIU, 간호사 노조 등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는데, 다음 날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에 비해 노조의 행진 대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로 건조하고 무겁다는 인상을 받았다. 단 한 번의 연좌도 없이 4시간 넘게 걷다 서다를 반복한 기후민중행진을 뒤로 한 채 우리는 교포사회에서 주최하는 2시간가량의 세월호 집회와 행진에 참여하였다. 교포사회에도 진보진영의 전반적인 열세 속에서 세월호 집회에서 극우보수세력(일명 가스통)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 날 이후에도 박근혜가 목기로 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앞과 정상회의가 열리는 UN 진입로에서 한국참가단은 몇 명 안 되는 시위대 속에서 주축을 이루었다. 점차 잊혀져가는 한국에서의 세월호 투쟁과 박근혜 퇴진에 중심을 두는 뉴욕 교포들의 세월호 투쟁의 간극,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북반구 노조와 남반구 노조의 간극,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환경단체와 에너지 노조와의 간극, 분명 공통분모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회의 및 간담회 내용

》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민중에게 권력을

〈세션 1〉 기후변화 전략 토론

아르헨티나 CTA 마이테 야노스 (Maite Llanos, CTA Argentina)

이 보고서는 TUED의 토론을 종합하는 내용이다. 노조의 전략이 무엇인지 토론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지방공무원노조 아스뵈른 발 (Asbjorn Wahl)

보고서 내용은 비판적이지만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이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든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기후변화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역사를 잘 요약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요구하는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노동운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있다고 제기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문제가 있다. 미국노총이 이 과학적인 접근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이것이 세계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다 아시겠지만 유엔 기후변화 회의 과정은 완전히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긴 과정에 대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조합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를 남기는 것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토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고서에 담긴 비판은 세 가지 차원에 있다. 정책적 차원, 정치적 차원, 방법적 차원이다.

정책적 차원은 노조는 지금까지 녹색성장, 녹색시장, 녹색경제에 몸담았다. 시장의 논리를 활용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노조가 대응한 이러한 접근을 완

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근법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요소, 노동권, 인권 등을 반영하는 형태였다. 그런 접근법을 채택한 이유는 세계 노조운동이 사회적 대화를 큰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찾을 수 없다. 노조는 주로 로비 활동을 해왔다. 유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관료들에게 로비를 했다. 이 활동의 주요 목표는 기후변화협상에 노조의 이해를 반영하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과 전술이 충분한가? 기후변화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의 세계정세를 잘 이해해야 한다. 당시 신자유주의가 제기되던 때였다. 노조 정책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그 틀 속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편 것이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유다.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다. 노조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노조의 전략과 전술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로비뿐만 아니라 투쟁해야 한다. 시장에 기반 한 노조의 전략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정책은 시장과 사회적 대화에 기반 한 것이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같이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단일한 이슈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 경제위기 불평등 실업 등에 같이 대응하고 다양한 의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한 가지 의제에 대응하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회와 경제적 위기라는 큰 틀의 대응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계급타협, 합의를 모색하면 안 된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에너지 민주주의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원하면 민주주의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이 전환을 계획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에너지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은 사용자와의 파트너십 전략과 로비 전략에서 사회운동에 기반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권력에 관한 문제이고, 그래서 투쟁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 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한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초국적 기업이다. 그렇다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로비 활동을 20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역사의 교훈을 얻어서 로비는 투쟁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힘이 충분히 강할 때만이 로비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필리핀노총 조슈아 (Josua Mata, SENTRO)

현장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겠다. 지난 리우 회의에서 남반구 노조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녹색성장 정책을 반대했다.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 성명서에서 우리는 녹색경제는 자본주의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오히려 그 녹색경제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와 똑같다고 밝혔다. 그래서 리우에서 남반구 노조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 동지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하는데 북반구 노조들은 별로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 불편하시겠지만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전부터 그런 비전이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초국적 기업을 세계 부를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녹색성장 토론의 주동력이다. 필리핀은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재난이 있었고 최근에 하이엔 태풍도 있었다. 수많은 주택이 파괴되었는데 정부는 50개의 집만 지었다. 필리핀은 이미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필리핀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60명의 노조 간부들이 살해당했다. 작년에도 두 명이 살해당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커다란 적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기후변화 담당자가 노조에 없다. 우리의 모든 캠페인과 사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나 욕심이 있다. 필리핀 노동운동 사회운동 특히 청년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문제는 이것이 우리 목표이고 요구인데 그것을 달성할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필리핀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고, 민영화 저지 투쟁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 에너지 민영화 반대투쟁은 성과가 있었다. 작년부터 민영화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큰 성과다. 한 지역에서 민영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반대 여론이 확대되었다. 필리핀 노조의 급진주의전통에서 체제 변화의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빠르다. <대안아시아를위한사회운동>이라는 연대체에서 사회변혁과 기후변화를 같은 의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FTA와도 연결된 문제다. 기후변화 문제가 더 큰 의제라고 본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 로비가 아니라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실내보다 실외 전

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노조가 대규모로 길거리에 나서는 것이 의미가 있다.

지구의 벗 활동가

지구의 벗은 세계 최대 환경단체 중에 하나이다. TUED의 저항하라, 탈환하라, 재건하라 지구의 벗 입장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보고서의 내용도 많이 동의한다. 지금 유엔에서 새로운 의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특히 유엔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많은 북반구 정부들이 의무적 감축 목표가 아니라 차별적인 목표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COP의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채택해온 전략은 실패했다. 과거에 환경문제 심각성 폭로하면 자연스럽게 정상들이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경단체가 양복을 입고 협상에 들어갔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로비를 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다. 누가 관련이 있고 없는지의 문제이다. 난 원래 반인종주의 사회운동을 했었다. 환경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환경문제에 관련한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엔 중심의 전략은 우리가 채택한 전략이 아니다. 급진적인 변환이 지금 필요하다. 이 보고서의 기본 주장에 모두 동의하고, 앞서 토론한 두 분 이야기도 동의한다.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코펜하겐 이후에 기후변화 운동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의무감축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기후변화 대응 절대 불가능하다. 내년 파리까지 사회운동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중의 경험, 즉 남미에서 발생하는 태풍, 재난 등의 경험을 잘 인식하고, 그들과 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반구의 민중의 경험을 충분히 중요시 한다면 평등,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페루 공무원노조 단테(dante alfaró)

페루에서 왔다. 페루는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몇 주 전에 COP회의 대응 연대체를 결성했다. NGO와 노조 연대체, 농민과 원주민 조직 연대체가 있었다. 이삼주 전에 양쪽 연대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연대체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상수도노조 대표이고 상수도노조가 연대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안회담은 8일 도착, 9일 회의, 10일 거리행진이 있다. 그리고 상수도노조가 물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회의에 대한 아이디어가 매우 많다. 페루에서 지

역적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지역 연대체를 구성해서 리마에 제기할 내용을 토론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는 남미 노조와 사회운동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연대체를 출범하고 출범 문서를 발표했다. 리마에서 기후를 바꾸지 말고 세계를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페루에서 정부가 조인하는 문서를 믿지 않는다. 2010년에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최근 한 지역에서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내일 함께 행진하자.

》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민중에게 권력을 〈세션 2〉 에너지의 사회적 소유 방안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

데이빗 보이스 (David Boys,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미국 전기노조 뉴욕지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해야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질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다른 현안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전략논의 할 때 일반 조합원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노조 운동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 미국에서 노조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바쁘다. 우리 지도부는 그래도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사업 배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합원이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자유토론 시작)

(데이빗 보이스) 샌디 이후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아졌나?

(미국 전기노조 뉴욕지부) 샌디 이후 조합원들의 인식이 강화된 것 맞는데 그런 인식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영국 공공상업노조) 최근에 영국에서도 홍수가 많이 일어났는데, 노조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인식하는 계기였다. 기후변화 복잡한 문제이고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는데, 환경문제를 조합원에게 이해 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녹색일자리 의제를 가지고 노동조합 의제와 환경 의제를 결합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과 청정교통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소책자에 담았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전략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의제 가지고 조합원이 제대로 토론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과 민영화문제에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데이빗 보이스) 지금 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심각하게 줄이고 있다. 많은 에너지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SEIU 보건의료지부 사무총장) 뉴욕에만 보건의료 노동자 십만명 조직하고 있다. 샌디 태풍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다. 그 태풍으로 조합원들이 기후변화의 영향 직접 경험했다. 샌디 태풍 속에서 환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하에 홍수가 일어나서 불이 다 나가고 환자들을 대피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노조 공격받고 있다. 보수적인 세력들이 노조 공격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노조가 보건안전 강화와 임금과 노동조건 위해서 싸우고 있다. 다른 노조와 비슷하게 기후변화 문제에 우선순위 매기는 것이 어렵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주장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고 조합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환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우리 사업장과 가정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국제적으로 노조의 도구가 필요하다. 뉴욕에 할렘과 브롱크스 남부에서 천식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 공기오염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이들이 특히 취약하다. 환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환경문제 연결시키는 것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문제와 환경문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조합원들이 간병을 하다 홍수로 피해를 경험한 일이 많은데 이런 경험을 기후변화와 연결시켜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 참가자) 브라질 경험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과제였다. 사회운동의 우선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 과제는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정부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조합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 내용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리마 대응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큰 투쟁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랑 협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을 동의하고 있고 합의서는 썼는데 정책으로는 변경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에게 우리와 합의한 내용을 정책으로 받아들이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인도 독립노조) 발표내용에 동의한다. 힘을 어떻게 키울지가 매우 중요하다. 남반구에서 이런 힘이 키우는 경험이 많은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겠다.

(미국 SEIU 뉴저지지부) 샌디 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환자를 대피시키고 환자를 구하는데 조합원들이 영웅적으로 활동했다. 외곽으로 이송된 환자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샌디의 경험은 기후변화에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계기였

다. 피해 동네 재건사업에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샌디 태풍 이후에 시장이 연방 정부 지원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했다. 사실상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얻었고, TUED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뢰해서 조합원들을 교육에 참여시켰다. 점심 때 한번 진행했는데 시간도 짧고 내용이 어려워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했는데, 첫 번째 교육에 85명의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서 노조의 기후변화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에 여러 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운동에 필요한 인원을 교육 사업을 통해 조직하고 있다.

(데이빗 보이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에는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응에 대해서 노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코넬 측의 두 발표를 듣겠다.

라라 스킨너 (Lara Skinner, TUED/Conell)

숀 스위니 (Sean Sweeney, TUED/Conell)

카일리 벤튼코넬 (Kylie Benton-Connell, TUED/Conell)

TUED의 한 가지 목표는 새로운 사회적 소유를 요구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배출량을 대폭 감소해야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노조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현재 PSI와 함께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사업의 주요 대상은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에너지 민주주의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노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 북반부에서 특히 교통노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을 탈탄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배출 감소를 위해 중요하다. 간호사 노조와의 제 경험, 교육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조합원 교육하는데 조합원들에게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의지가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규모가 매우 커야 한다.

노조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이 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 협동조합 어떤 것이 좋은 협동조합인지, 노조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는 지방정부로의 재국유화 프로젝트다. 독일을 비롯해서 몇 개 유럽국가에서 이런 재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는 탈환과 재건이다. 공기업의 탈환과 개혁이 중요하다. 노조가 제기할 공기업의 개혁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넷째는 필요에 근거한 정책을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 뉴딜 때 진행된 공공에너지 프로젝트 검토할 예정이다.

① 협동조합 사례 검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생기고 있다. 독일에는 800여개의 조직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캐나다는 70개, 스페인도 1만4천명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이런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은 노동자 조직화에 꼭 친화적인 환경은 아니다. 다른 연구자는 협동조합의 한계점을 정리하고 있고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도입에 있어서 노조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조의 입장을 제시하고 싶다.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대도시에서 있는 협동조합이 중산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지역, 지방에 존재하는 협동조합도 있다. 토론토의 윈드셀(?)이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풍력터빈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도 있다. 화석연료 중심 협동조합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치적 입장도 다양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 있는 다른 부문에도 협동조합이 존재하는데 에너지기술 분야나 건설 분야의 협동조합이 있다.

세 가지 사례를 발표하겠다. 특히 노조 입장에서 흥미로운 사례들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조와 협동조합의 관계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는 사례다. 첫 번째는 에너지 민주주의 입장에서 특이한 곳에 있다.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이다. 독일금속노조(이게메탈 igmetall) 노동자평의회에서 시작했고, 공장에 태양광 장비를 설치한 용량은 최대 일백가구에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퀘벡 발레오 협동조합이다. 58개의 풍력발전기로 농장에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거버넌스 구조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노동자를 통한 경로도 있다. 노조가 통제하는 데에는 협동조합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 전환에 참조할 수 있는 사례다. 셋째, 덴마크 코펜하겐 협동조합 사례다. 풍력 스무 개의 절반은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절반은 지방 공기업이 소유한다. 그런데 민간 기업뿐 아니라 노조도 투자하고 있다. 이것

이 노조와 협동조합의 관계를 이상화한 그림인데, 이런 방향을 대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②③ 재국유화 사례 검토

재국유화 할 때 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노동조합 대표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민영화 저지 투쟁과 재지방정부화, 재국유화투쟁을 하고 있는 많은 단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 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지방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보통 민간위탁 된지 이십년이 만료되면서 재국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민영화 경험을 실패로 동의하고 있다. 독일에서 특히 재국유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방 에너지의 20%는 이미 재국유화되었다. 재국유화에서 핵심은 화석연료기업이다. 에너지원은 여전히 화석연료이다. 두 가지 사례 소개하겠다. 볼더 콜로라도 사례. 미국 서부에 있는 중간 크기의 도시이고 좀 진보적인 곳이다. 볼더의 환경단체 연대체가 <재생에너지 예스, 재국유화 예스> 연대체를 결성했다. 엑셀이라는 민간기업이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에너지를 공공기업으로 다시 찾아 오려는 투쟁을 했다. 민간이 운영할 때 요금이 인상되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이 있었다. 민간기업이 계획된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생긴 시민들의 반감도 있었다. 연대체는 재국유화와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요구했는데, 석탄광산 노동자들이 재국유화를 반대했다. 연대체가 요구한 것은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환이었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바로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투표를 제기해 통과되어서 재국유화가 진행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금 논의 중이다. 둘째, 베를린 사례이다. 다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에서 재국유화 요구했는데 한 노조는 참가했고 금속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재국유화 대상도 훨씬 컸다. 환경적 사회적 목표가 뚜렷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고 민주적인 운영도 중요하게 다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었다. 전력요금을 누진세 형태로 책정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다. 전기를 활용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력용량의 일정량 무상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승계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도 정하려고 했으나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투표자는 다수 찬성했지만 투표율이 저조해서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북반구에서 진행되는 재국유화 사례를 볼 수 있다. 남반구 동지들이 이것이 남반구에서도 좋은 사례인지 말씀 해 달라. 주민들이 주도하고 요구하는 재국유화사업이 더 많이 생길 전망이다. 그러면 이것이 몇 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떻게 투쟁할지 고민할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 재국유화 된 지역은 단 몇 개에 불과하다. 재국유화 할 때 송배전망이 주로 재국유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문제인데, 전력이 재국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리는 상수도가 국유화되었을 때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에너지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재국유화 이후에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민간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기업들이 재국유화된 이후 쉽게 상업화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재국유화 투쟁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노조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고, 재국유화 했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 재국유화가 곧바로 공공성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국유화 되어도 공공성의 수준은 다양하다. 상업화의 위험이 높고, 노동자와 국민들이 에너지 체제를 구성하는 데 실제로 의견을 낼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재국유화를 요구하는 많은 세력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의 확대도 요구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느리다. 재생에너지 기업의 조직화율은 매우 낮다. 재국유화되고 재생에너지를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데, 노조 조직의 기회와 확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역사의 교훈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밖에서 생겼다. 시장에 의지했다면 공공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뉴딜의 농촌전력화청(REA) 사례를 보자. 당시 미국의 농장 11퍼센트만이 전기 공급을 받고 있었다. 뉴딜 하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원을 마련해서 비영리 협동조합에게 자금을 제공했다. 지역주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위해 대출해주는 것이 안 된다고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성공했고 11퍼센트보다 훨씬 더 많은 농장들이 전기공급을 받게 되었다. 60년대까지 한 지역 농장의 97프로가 전기를 공급 받게 되었다.

60년대 케네디는 해외 원조사업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에도 협동조합을 확대하려고 했다. 중국도 정부가 전기를 공급한 비슷한 사례가 있다. 소련의 기술을 받아 지방공사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했다. 정부가 기술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렇다면 이제 <재생에너지청>이 필요한 것 아닐까?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 정부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점진적으로 100프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달성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역사적 사례를 검토한 것은 민중의 필요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론 주제는 세가지다. 첫째, 노조가 협동조합 구성에 참여해야 하는가하는 문제. 사회적 친환경 협동조합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에너지 재국유화가 우리가

가야할 길인가? 그리고 공기업 개혁 문제에 대해 토론하자. 셋째, 녹색시장이라는 접근법은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만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일 집회에서 우리의 기후변화 대책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구체적 답변이 필요하다. 대안이 있어야 한다.

(데이빗 보이스) 사회자로서 몇 가지 지점 제기하겠다. 뉴욕에서 우리는 샌디 후 재건을 위해서 민간 기업이 충분한 자원이 없다는 점을 보았다. 민간기업은 비용절감위해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다.

캐나다공공노조 CUPE 그라함 콕스 (Graham Cox,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협동조합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력을 잡는 것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전력부문이 시장화 되었을 때 협동조합과 민간 기업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협동조합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시장을 열어주면 결국 시장화된다. 캐나다에서 협동조합을 위해 시장을 열어줬는데 협동조합은 역할이 적고 다른 기업이 참여하여 훨씬 더 시장화 되었다. 시장화와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FTA를 체결할 때 민영화는 가속화된다. 캐나다에서 FTA 동안 민간 기업이 공격한 경험이 많이 있다. 협동조합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 주장은 지방공기업이다. 여러 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국유화를 주장하기 힘들어진다. 한 지역에서 배전망이 공영화되면 한 지역의 공기업이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공영화를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 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 기업 조직화가 거의 안 되어 있다.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접촉 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다. NAFTA에서 공기업이 제외되어 있는데, NAFTA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국유화하는 것이 더 맞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략과 전술을 혼합하고 있는 것 같다. 협동조합은 전술이다. 벌써 민영화된 상황이면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캐나다를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존재한다. 공기업이 상업화되었을 때, 즉 민간 기업처럼 행동하는 공기업이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투자축소를 이야기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감축시키는 것인데, 협동조합은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민간 기업을 재국영화할 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자리를 보전과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변할 때 집중화된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다뤄야 한다. 노조는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보통 재활용 등 소소한 사업에만 참여한다. 그러나 환경위원회는 단체교섭에 참여해야 한다. 단협과정을 통해서 노조로서 기업의 운영방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 발전소에서 발전회사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기업에서도 환경위원회가 단협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도입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사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요구를 통해서 에너지전환에 관한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단협을 통해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요구를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CUPE는 사회적 노조주의인데, 어떻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다양한 방식의 재국유화 등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 모두는 노조와 지역사회단체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다. 에너지 노조뿐 아니라 비에너지 노조와의 소통도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사업장에서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에너지 노조와 비에너지 노조의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남아공 PSI 연구소, 산드라 반 니커크 (Sandra Van Nierkirk,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Unit/1Million Climate Jobs Campaign)

남아공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피에스아이 연구소 소속이다. 지역 사회 소유인가, 중앙 정부 소유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둘 다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지역사회차원에서도 가능하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국가 소유와 지역사회 소유의 통합이다. 현재의 에너지 체제는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남아공에서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300만 명이 지속적인 전기 공급을 못 받고 있다. 선불방식으로 전기를 공급 받기 때문에 끊길 때가 많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보다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에 민간이 참여하면 그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것역시 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여준다. 협동조합은 한 지역의 소수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체계 내의 한 사례이지 체계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남아공은 재생에너지 전체가 민영화된 상황이다. 제대로 국가에 의해 운영된 적이 없다.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풍력 태양열 발전이 생기고 있는

데 결국은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효율성 강화 프로젝트이다. 에너지효율성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룬 데 투자하면 다른데 투자할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빈곤층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충분한 돈이 없다.

남아공금속노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광산산업을 재국유화해서 그 수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또 다른 문제는 협동조합 참여 주민들이 돈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충분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남아공 사례는 민간이 주도하면 발생하는 폐해를 보여준다.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남아공은 민간 기업들은 남아공 북쪽에 풍력 태양광 태양열을 건설하고 있다. 빈곤층이 사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다. 남쪽 지방에서는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북쪽에 집중하고 있다.

(캐나다 노조 활동가) 재국유화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회적 정책의 시도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되고 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 아닌가? 우리는 전국 차원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지만 지방정부 지역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세계 녹색도시 네트워크에 50여 개의 시가 녹색에너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대 세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데이빗 보이시) 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정부에 먼저 접촉한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한 논의 중에서 시의 정책과 논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에 책임이 있지만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PSI에서 시 정부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와도 접촉하고 있는데, 내용에 동의하지만 실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피델) 피델이라고 한다. 시공무원이다. 배전공기업에 있는데, 발전은 다른 문제이다. 구십년대 중반부터 발전의 49프로가 민영화되었다. 결과가 좋지 않다. 초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재투자하고 있지 않다. 결국은 투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싼 값에 민영화되었지만 결국은 투자하고 있지 않고, 민영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소가 공공 지출을 통해서 설립됐다. 가스 중심의 발전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GDP 60%가 전력부문에서 창조되고 있고 4만명이 고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에 책임이 크다.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TUED 활동 관심있게 봤다. 민영화가 많이 추진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집중해야 할 문제는 남은 에너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간호사노조) 질문 있다. 사회적 소유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 알고 싶다. 공공 소유인 것인지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통제가 포함된 개념인지. 이것이 남아공금속노조의 용어이다.

(답변) 공공소유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소유이기도 하다. 국가에 의한 소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노르웨이 지방공무원노조) 지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큰 비용이 기후변화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 투쟁에서 중요하다.

(캐나다노총) 내가 본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대부분 사업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1프로 이하이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생기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노조들이 운영하는 노조연금기금을 노조이사회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유효한 근거가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환경적 위기뿐만 아니라 투자한 돈도 없어질 수 있다, 경제위기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캐나다 녹색일자리 네트워크가 있는데, 캐나다가 남아공 사례 많이 참조하고 활용하고 있다.

(아스빅른 발) 우리 경험에서 공공이 좋고 민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공공부문이 시장화가 많이 되고 있고, 공공부문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넓은 연대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공기업의 시장화를 반대하고 있다. 민영화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주화도 같이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큰 과제다.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데이빗 보이즈) 사회적 통제 사례 중에는 브라질 사례가 가장 유명할 것 같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연설 및 토론

(나오미 클라인) 나에게 기후변화의 혁명적인 잠재력을 보여준 사람이 손 스위니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 일은 많은 사회운동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과학적 분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학을 보면 우리에게 시간은 별로 없다. 내일 행진이 신난다. 노조가 대규모로 참여할 것이고 과거보다 훨씬 대규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TUED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나는 기후변화 문제 속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많은 나라들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건설되었다. 독점적 자본과 화석연료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점 권력에 대응하는데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끊임없이 대응해 왔으나 화석연료의 독점적 성장을 깨지는 못했다. 화석연료는 독점적 성격이 있다. 그러나 태양 바람 물은 집중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 기후변화 운동의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재생에너지로도 돈을 벌수 있으나 집중화된 재생에너지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방해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민주적 에너지다. 우리가 개입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중, 노동자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 만약 풍력을 원주민 의사에 반해 개발한다면 (기업들과)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재생에너지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운동과 노조운동의 협력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싸우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에너지가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의의 제목이 <Power to the People>인데 민중에게 권력을, 민중에게 전력을 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난, 갈수록 정부의 권력을 이전받고 있다는 민간기업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민중들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 권력을 통해서 노동자와 민중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자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도 지속가능성이 없다.

(영국공공사업서비스노조) 영국공공사업서비스노조 크리스 볼프이다. 영국에서 민영화 많이 진행되어 공공노동자들인 민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나오미의 새 책에 나온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다. 2008년 경제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였다. 특히 투기자본과 그 자본을 지원하는 정부가 만든 위기이다. 환경위기도 자본이 만든 위기이다. 2008년 위기 발생했을 때만은 평론가들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코멘트를 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맞는 분석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긴축반대 투쟁이 기후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노조의 문제이다. 세 번째 기후변화 문제에서 우리의 대안을 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영국 100만 녹색 일자리, 대중 공공교통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말할 수 있다. 또 재난을 경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추상적이지 않다. 매일 경험하는 일이다. 그 경험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공노동자다. 마지막으로 기후문제가 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면 우리는 민주적 통제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권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 체제, 아래로부터의 에너지 통제가 필요하다.

(나오미 클라인)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무역기구 반대투쟁과 같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동참했다. 세계무역기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대할 수 있었다. (웃음) 기후변화도 똑같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는 사라질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 기후변화는 운동 건설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표도 제시하고 있다.

》 9월 20일 TUED 전략 워크숍: 민중에게 권력을 〈세션 3〉 TUED 발전 방향 토론

(데이빗 보이스) TUED가 노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TUED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토론해보자. 지금까지 소식지와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내용이 배포되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직접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고 화상통화 회의도 진행했다. 소통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토론하면 좋겠고, 웹사이트 개선도 이야기하면 좋겠다.

(숀 스위니) 수압파쇄 보고서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 동지들도 의견을 내면 좋겠는데, 영국 파쇄 논쟁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메탄의 지구온난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전략토론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다. TUED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에 가입하려면 목적과 비전에 동의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우리는 웹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다.

첫째, 노조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자원이 한계적인 것은 사실이나 40여개의 참가 노조 중 삼분의 이가 정기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핵심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담론을 바꾸는 것이다. 녹색성장 담론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주도하는 담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는 시행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가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이 있다.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정도로 할 수도 있지만, 자원을 확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권력을 위한 투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하려면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노조들을 조직 해 달라.

(미국 전기노조 뉴욕지부 활동가) 우리노조는 TUED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지도부는 이 사업을 지지하지만 노조 내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문제 등 세계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불평등 의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명이 반대하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조합원 입장에서 이 의제가 어떤 의미인지 많이 생각했다. 기후변화가 조합원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고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 샌디는 조합원에 두 가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개인적인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사람도 있다. 조합원들은 샌디를 이중적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과 많이 소통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직접 내용을 찾도록 유도한다. 무조건 토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GMB) 영국 GMB에서 왔다. 손 동지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난관을 진지하게 돌아 보아야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많은 항의에 부딪힐 것이다. 많은 노조가 여기 모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더 많은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모순을 담고있는 제도다. 많은 노조가 긴축에 맞서 싸우는데, 긴축에 저항해 성장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성장은 안 된다. 우리 노총TUC에 계속 압박을 해 노총이 확실히 입장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 조합원들도 설득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우리 생각방식도 바뀌야 한다.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소비와 우리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을 다뤄야 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환경도 바뀌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고민거리가 많이 생겼다. 이 과제를 분명히 우리 것으로 받아들지 않으면 지구를 보호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 활동가) 담론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미 담론이 바뀌고 있다. 남미 정부 간 회의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보면 벌써 노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벌써 노조 내에 담론으로 존재한다. 이년 전에 두 세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남미에서 코먼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노동운동 내에 자연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TUED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 내년 파리에서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 정상회담 논의는 건설적이지 않다. 파리를 바라보면서 투쟁을 강화하자. 그런 투쟁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 네트워크이다.

(미국 간호사 노조) 작년 가을부터 참여했는데 그동안 만들어 온 큰 진전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있다. 이번 기후행진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다양하고 넓다. 이번 행진을 포함한 뉴욕에서 이번 주에 진행될 많은 행사가 TUED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TUED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며 노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뉴욕의 전반적인 토론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행진이 전 미국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노조의 과제,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최근에 별로 없었다. 기후변화 논의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뉴욕 간호사노조 위원장) 이런 수준의 논의는 미국 노동운동에서 드문 경험이다. 미국 노동조합은 지금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 간호사노조의 새 지도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손과의 협조가 가능했다. 담론을 바꾸든지 패러다임을 바꾸든지 출발점은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다.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모두 위기가 오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민영화를 겪으면서 민영화 반대의 입장에서, 노동권과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이야기를 확대해서 다른 의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토론은 거의 모든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퀘벡 노총) 이런 토론할 공간 많지 않다. 내가 노조에서 가장 급진적인 입장에 있지만 이 내용을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 로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 나서야 하고 리마와 파리 회의에도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몬트리올에서도 이런 집회와 행진을 하지만 더 지역적인 문제점에 대응을 해야 한다. 많은 진전이었지만 아직 이걸 노조 투쟁이라고 할 수 없다. TUED는 노조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조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석연료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일 수 있다. 경제계획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의 관련성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데이빗 보이스) PSI가 TUED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하겠다. 우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네트워크에 재정을 지원하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에 있는 PSI 연구소에서 물과 에너지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큰 영향력이 있다. 프랑스 상수도 재공영화할 때 연구소 역할이 컸다. 우리는 새로운 담론도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또 우리는 세계 조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초국적기업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를 만들려면 세금을 걷어야 한다. 금융거래세에서 확대해서 초국적 대기업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녹색성장에 관한 토론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 또 공공

기금, 연금기금이 민영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개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노조의 영향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중요하다. 노조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의 논의에 개입해야 한다. 각국 정상에 대한 로비가 이어져야 한다.

(미국 간호사노조 페르난도) 지난 이년동안 TUED는 큰 기여를 했다. 이념적인 틀을 제공했는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사업화 하려면 우리의 기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조합원 교육사업 우리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 사업 강화하려면 우리는 각 노조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안 해도 되고 노조가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 기반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이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환경 투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운동에 참여한다면 조합원이 TUED를 지지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교육자료를 마련한다. 프래킹 보고서가 좋았는데 비슷한 연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극단적 에너지에 대한 비판이 더 필요하다. 기후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필요하다. 시민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노조가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TUED를 통해서 간부풀을 만들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에라, 환경단체) 첫째 환경단체와 직접 소통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활동가들이 노조와 노동자들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기후변화에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 환경활동가들이 경제적 정의와 전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만나달라. 환경활동가들이 환경문제만 생각하고 노동자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생각을 못한다.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접촉이 중요하다. 둘째, 본국에 돌아와서 다른 노조에게 기후변화를 노조의 문제로 생각하도록 해 달라. 미국에서 많은 노조가 기후변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화석연료 산업 조직률이 높기 때문에 노총이 기후변화 문제 다루고 싶지 않아 한다(우회적으로 미국 노총 비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환, 사회적 소유, 협동조합 토론이 중요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은, 정부 정책 차원의 문제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너지청이 청정발전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각 주의 발전소들이 배출량 감소 계획하고 재생에너지 도입해야 한다. 거기에 노조가 개입해야 한다.

(페루 활동가)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한다. 가맹조직에게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면 어떻게 참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가 노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노조가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번역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긴 글을 읽는 것을 힘들어 한다. 우리는 만화형태의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런 교육자료를 활용해서 150여 개 가맹조직 이만명이 참여한 민영화 반대 연대체 활동을 해왔다.

(데이빗 보이스) 통역 번역 문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자료 영어로만 하면 안 된다. 문제는 번역 사업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번역 수준도 어려운 문제이다. 한 가지 자료가 번역되면 이것이 잘 번역되었는지 담보할 방법이 없다. 한국어로 자료 번역하면 그게 잘 번역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노조가 참여할 방법은 번역 지원일 수도 있다.

(손 스위니) 우리에게서 민영화의 위기, 인종적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가 있다. 기후변화는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조합원을 동원할 수 없다. 남반구 북반구 간의 연대가 중요한 만큼 원주민에 대한 연대가 중요하다. 정치적 협상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노조의 투쟁에 정치적 협상이 필요했다. 우리는 다 협상자이다. 사용자들과 교섭한다.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정치적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봤으면 좋겠다.

(미상) 손 동지가 방금 한 이야기에 관한 것인데. 우리에게 손 동지가 던진 과제를 우리 것으로 받아야 한다. 내일 25만 명이 길거리에 나설 것이다. 우리 조합원의 90프로가 처음으로 환경 투쟁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TUED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미국에 양당체제인데, 노동자를 위한 자리가 많지 않다. 우리는 정당이 없고 녹색당은 크지 않다. 지난 30~40년 동안 방어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에너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 아주 폭넓은 연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TUED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노동운동의 규모가 작다. TUED의 지도가 없으면 사회변혁운동 참여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게 되었다.

(국제운수노련) 손 동지가 말한 것 담론을 바꾸는 것 필요하다고 했는데, 담론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이다. 국제운수노련 지난달에 총회를 진행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 했다. 그중 두 가지는 주요 간선과 운송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대규모 동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도시나 교통이 밀집한 곳에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도심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화 생각했을 때 전략적 지점을 찾아야 한다.

(미국통합노조) TUED가 해산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생각이다. 우리 노조는 다른 미국노조와 비슷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데에 TUED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합원들이 행진에 참여하는 것도 역사적인 일이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관심이 많이 생기고 접촉면도 늘어나는데 그게 중요하다.

(캐나다노총) 나는 이년동안 TUED에 참여했다. 민영화 규제완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 2년 전에 퀘벡에서 철도 탈선 사고로 수 십명이 죽었는데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발생한 사고였다. 어디서는 물 오염으로 한명이 죽었는데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결과였다. 한 발전소에서는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민영화의 결과였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TUED 강화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까? 남반구에서? 시카고 레이버노트에서 한번 진행했는데, 다른 곳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거나 대회에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어 번역은 캐나다노총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AFLCIO 만나서 조직해보는건 어떨까?

(아스빈른 발)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을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 제기하고 있다. 노조 내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다른 문제와 경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리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후변화 투쟁에 부의 재분배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결국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후변화운동에 있어서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할 기회가 많은 것 같다. 노르웨이에서 연대체 만들고 있는데, 연대체 통해서 다른 투쟁 다른 의제와 접촉하고 있는데 환경운동과도 그러하다.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배워서 우리는 대안 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

(데이빗 보이스) TUED가 얼마나 활발한지 잘 보여주는 토론이었다.

(손 스위니) 오늘 토론이 매우 풍부했다. 2년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기억하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할 지구가 없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큰 투쟁을 할 것이고, 내년 파리에서 큰 투쟁을 해야 한다. 미국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할 텐데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누가 리마에 갈 건지 파악해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 TUED는 리마에서 회의를 할 것이다. 국제노동총의 콥 성명서는 TUED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채택했다. 유엔 회의가 그 내용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9월 20일 국제공공노련(PSI)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 간담회

(한국참가단)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조를 공격하고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공격 받는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서는데 위축되고 있다.

(데이빗 보이스) 오늘 회의에서 내가 강조했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노조 파괴가 세계은행이 전파하는 노조 파괴 정책과 같다.

(참가단) 박근혜 정부는 일차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이차 공격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이 민영화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구조조정, 근로조건의 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전력회사를 소비 부분까지 시장화하려고 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원격검침 등. 삼성, KT 등 가전, 보험, 통신 대기업들이 스마트 그리드의 추진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며칠 전에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발표했다. 또한 다섯 개의 발전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것은 완전한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발전, 철도, 가스가 민영화를 막는 한국의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어려운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데 투쟁의 대가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가압류 손해배상, 이차처벌 등이 지도부만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대나 지원을 부탁드린다. 한국처럼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나?

(데이빗 보이스) 남미가 훨씬 심하다. 한국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한국이 분단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많은 세력들이 분단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 노동의 문제는 잘 모르고 있다. 한국의 문제 특이한 점이 있고 OECD 중에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탄압이 가장 심하다.

(참가단) 한국의 분단은 자본주의 문제, 시장을 확장하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데이빗 보이스) 한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참가단) 요금 측면에서는 민영화 반대가 지지를 받지만, 실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뿌리는 상당히 약하다. 공공부문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노동권이 상당히 파괴되었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했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면 한국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토대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데이빗 보이스) 일반 국민들은 노동기본권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고임금 노동자 중 노동권 공격을 받은 사례는 동력 발전 민영화 저지 투쟁이 있었다. 이 투쟁에서는 민영화 추진 세력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소수 금융회사 등의 집단들이 민영화 추진하도록 정치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있었다. 오십억 정도. 우리는 이것을 폭로하고 여론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노동탄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적과 새로운 연대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상장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 외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한국의 전기요금은 필리핀보다 높습니까? 주식에 상장되면 요금이 인상됩니까? 등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태국에도 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했을 때 전력회사들이 민영화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선전했다. 민영화를 지지 세력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태국에서처럼 광범위한 연대와 시민 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단) 한국에서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또한 현재의 공기업을 민주적, 민중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나 모범적인 해외 사례가 있는가?

(데이빗 보이스) 한국을 보면 노조는 정부에 대한 전투적 투쟁 방식으로 민영화를 막아왔다. 그런데 또한 일반 국민의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영화되면 얼마나 나쁜지를 설명하고 국민들을 충격을 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를 막으면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참가단) 민영화는 일국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많은 이윤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발생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그런 세력이 국제공공노련 내에 있는지 궁금하다.

(데이빗 보이스) 우리는 이것이 세계적 제도의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국제공공노련은 지금은 부문별로 접근하고 있다. 의료가 왜 민영화되면 안 되는지, 아프리카는 왜 전력 공급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것이 지금 국제공공노련의 전략이다. 민간노조보다 우리가 사회 전체의 체제전환을 생각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다. 민간 노동자의 모순적 위치보다는. 현재 에너지 민영화 저지를 위해 다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력 민영화를 막는 것이 대책이 되지 않는다.

(참가단) 원자력 민영화되어 있는 곳 많은 데, 노조 조직화되어 있는지? 오늘 TUED에서 재공영화 국유화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원자력 재공영화 재국유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세계적인 원자력 노조들의 연대가 있는지 궁금하다.

(데이빗 보이스) 원자력 산업 전체가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대부분 민간이다. 독일은 다 공공인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65프로가 조직된 상태이다. 영국은 민간이 원자력을 운영하는데, 정부가 새로운 발전소도 건설하려고 한다. 여기에 막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원래 공기업이 해야 할 역할인데. 러시아는 다른 산업은 대부분 민영화했지만 원전은 공영이다. 영국에서 원전을 민영화했는데 정부 보조금이 2억 파운드가 들어갔다. 원전 노조들이 안전이나 보건 문제에 대해서 국제공공노련 내에서 소통하고 있다.

(참가단) 스마트 그리드, 판매 시장 개방 민영화 폐해 사례가 궁금하다.

(데이빗 보이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 최근 사례는 호주다. 도입에 반대했고 성공했다. 호주에서 온 다른 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수 있을 것 같다.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반대할 때 조심할 것은 스마트그리드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요금을 인하 할 수도 있다. 스마트 그리드 반대할 때 효율성에 반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에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와 대규모로 이뤄지는 투자만큼은 효과가 없는 점이다. 스마트그리드는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 민영화 판매를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투쟁을 지원하기위해서 연구 계획을 세우려면 어떤 연구 사례가 좋은지 알아봐야 한다. 필리핀, 아프리카, 영국, 미국 등에 대한 연구 계획을 짜야 한다. PSI 연구소에 요청하면 사례를 알 수 있다.

(참가단) 개인 사생활 정보 완전히 공개한다. 누가 언제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 등등. 투자비막대하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전노조가 대응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

(참가단) 스마트그리드 가난한 사람 혜택 못 받기 때문에 불평등 더욱 커질 수 있다. 중산층은 가능하나 주거 빈곤층은 하기 힘들다. 영국 브리티시가스 민영화 우수 사례로 선전되는데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나? 요금은 어떻게 되었나?

(데이빗 보이스) 모든 해외사례를 잘 알지는 못한다. 연구소 스티븐 토마스가 영국 가스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정보도 많을 것이다. 전반적인 영국 상황을 통해 보면 민영화 이후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단) 전력 소매부문을 경쟁시킨다고 하는데,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있는가? 전력선이 경쟁적으로 깔려 있는 경우도 있는가? 어떻게 전력 판매 경쟁이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데이빗 보이스) 경쟁이 안 된다. 다른 선은 없다. 연구소 웹사이트에 영국의 폐해 사례 등이 많이 나와 있다. 똑같은 송배전선을 쓴다. 고압송전선은 공공일 것이다. 발전소는 송배전선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제하는 정부기관이 있다.

(영국 공공상업서비스노조) 영국은 민영화 30년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자본주의 입장에서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공기도 민영화할 수 있었으면 민영화했을 것이다. 송배전은 민간인데 한 개의 민간기업이다. 소매부문 경쟁 있으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거라고 하는데 아니다. 전력 소비자한테 소방관노조가 낸 것을 내일 집회에서 전달해주겠다.

(참가단) 대처 이후에 영국 국민들도 민영화의 폐해를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전력 우체국 등 재국유화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나?

(영국 공공상업서비스노조) 그렇다.

» 9월 22일 TUED 연구교육 사업 토론

(로자룩셈부르크재단) 각국 노동조합이 어떤 교육 자료가 필요한지, 특히 남반구 노조의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 어떤 주제로 어떤 주요 내용으로 제작하면 좋은지. 우선 TUED를 소개하는 내용을 준비하려고 한다. 많은 노조들이 조합원 교육에 대해서 발언했지만 각 노조에서 적어도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숀 스위니) 교육 대상이 지도부인지 조합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같은 자료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영국) 조사보고서 발표하는 것은 계속 도움이 되고 있다. 파쇄에 관한 보고서 조합원 토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소책자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기후변화가 왜 노조의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운수노련) 가맹조직 지도부가 에너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동할지 고민 중이다. 조합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부가 필요한 것은 조합원에게 에너지 민주주의 실천법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필리핀) 에너지민주주의 캠페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인도) 우리는 지도부 교육이 먼저다. 아직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지도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적으로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노조 간부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다. 노조 조직화를 먼저 하기 위해서 지도부 설득을 먼저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포스터 제작에 의견이 있다. 연대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남아공 PSI 연구소) 지도부와 조합원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내용이 필요한지,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이 필요한지를 얘기해보자.

(필리핀) 이 문제는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적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 개념을 먼저 제안한 손 동지의 의견을 듣고 싶다. TUED는 더 크고 광범위한 조직이 되고 있다. TUED의 요구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다. TUED를 운동을 건설하는 네트워크로 본다면, 내가 보기에 그것은 노동자를 조직하는 네트워크다. 우리의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교육에 대한 토론도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손 동지는 앞으로 자원을 많이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럼 제안한다. 자원 확대를 위해서 국제노총의 캠페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자.

(아스뵤른 발) 교육자료 내용에 대한 제안이다. 핵심적으로 기후변화 투쟁과 사회적 투쟁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투쟁 전략 전술에 관한 토론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가지고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자료와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각 노조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그 정책에 맞는 전술을 마련해야 한다.

(페루) 민영화 법의 내용을 모르면 민영화 저지 조직할 수 없다. 두 가지 차원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TUED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에너지 민주주의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반구는 좀 다를 것이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열려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어제 재국유화를 이야기했는데 남반구에서는 좀 생소한 이야기이다. TUED 내에 남반구 노조의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미에서 중요한 문제인 추출주의는 여기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을 논의에 포함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국제노총의 입장에 매우 비판적이다. 국제노총의 유엔 협상 대응 방식을 비판해야 한다. 실내전략은 필요하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실외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사회운동과 연대해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한국참가단) 우리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 발전, 가스, 원자력 노동자들인데, 그러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그만하자고 하면 어렵다. 환경과 노동의 공통점은 이윤 생산 체제가 환경과 노동을 파괴한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에너지 민주

주익은 생산의 주체가 생산을 결정하는 것이고, 결국 공장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
주관리, 경영참여 등이 있는데 이런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민영화
저지를 우리는 조직한다. 민영화가 되어있는 곳은 재국유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노조
와 지도부가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이다. TUED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
직해내서 노동자가 에너지 생산의 주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참가단) 교육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15년 동안 민영화
저지 투쟁이 진행되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여기 동의하고 있다. 노동자, 국민들이 민
영화 문제를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의 폐해 사례,
민영화 진행 사례, 재국유화 사례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하면 한국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페루) 페루에서 물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인 노조들의 연대를 호소
하고 싶다.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스위니) 역량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현재 상근자 두
명뿐이고 노조가 조금씩 재정 후원을 하고, 로자룩셈부르크 재단이 후원하고 있지만,
노조의 후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제안된 많은 것들을 하고 싶는데 현재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리마에서 우리의 내용은 국제노총의 성명서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명서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명서를 발표해도 국제노총의 정책으로 발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명서가 채
택되면 그 내용이 정책이 되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 그게 성공하면 그 성명서의 내용
이 실천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압박해야 한다. 많
은 사람들이 TUED가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서도 아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책을 노조가 가져가서 잘 활용해
야 한다. 운동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한계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
야 한다.

(브라질) 브라질 노총 간부가 얼마 전에 국제노총 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새
로운 기회가 왔고, 많은 가능성이 열렸다. 국제노총과 가맹조직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인도) TUED는 연구소 성격과 네트워크 성격이 있다. 연구소에서 네트워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계 세계노총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 세계노총도 중요하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도 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연대체이다. 에너지민주주의가 거기에서도 소개되어야 한다. 국제노총만의 문제는 아니고 훨씬 더 다양한 국제노동운동의 맥락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

(국제운수노련) 많은 이야기들에 동의한다. 국제산별노조도 있다. 여기에는 많은 노조들이 국제노총보다 산별노련과 사업을 더 많이 한다. 아래로부터의 압박이 있어야 국제노총이든 산별노련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토론을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민주주의에 관한 별도의 네트워크로 활동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국제산별노련이 이런 내용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브라질) 남미노조연맹에서 새로운 강령에 에너지 민주주의를 담았다. 그런 내용으로 가맹조직을 교육하고 있다. 리마에서 국제노총이 발표할 입장에 새로운 내용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리마에서 진보적이고 강한 입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TUED는 연구소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우리가 지금 TUED 네트워크의 성격을 토론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네트워크로서 국제노동운동 조직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국제노총과 연관을 갖고 싶지 않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조합원이 많다. 그러나 국제운수노련은 구체적인 요구와 계획을 내기 때문에 국제노총과 다르다. 국제노동조직이 우리에게 맞는 활동을 하게 하려면 그들을 민주화시켜야 한다. TUED의 핵심 역할은 새로운 내용을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노총 국제산별노련을 압박해서 그런 내용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TUED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국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TUED의 내용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영국2) 국제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위니) 기후변화와 관해서 내 생각은 국제산별, 국제노조들이 무언가를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유엔 기구에 의존한다. 그러면

보수화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TUED에 대해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은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련들과 좀 더 친화적으로 접근하고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

(아스빈튼 발) 이런 내용이 국제노총 2010년 대대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운수노련의 기후변화입장보고서를 보면, 많은 가맹조직이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국제노조들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다.

(뉴욕 간호사노조) 많은 차이가 있는게 우려스럽다. 우리가 해야 할 이념적인 투쟁이 너무 크다. 우리 노조는 국제적인 영향력 있는 것 아니지만, 간호사로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사회적 발언을 하면 영향력이 있다. 우리는 우선 재정사업을 할 수 있고, 자료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만화 활용하면 우리 조합원 반응 좋을 것 같다. 에너지노조, 공공서비스노조, 간호사노조 다 성격이 다를 것이다. 미국 교원 노조가 시카고에서 공격을 당했는데, 사회적 지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정사업을 하고 지구협에 TUED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것은 미국의 노동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스위니) 나는 국제간호사노련의 회의에 참여해서 교육과 여러 사업을 할 예정이다.

(페루) 세 가지 만화를 만들기 위한 후원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 그 중 하나는 미국이었다. 세 가지 만화를 만들고 소책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페루 신문에도 이 만화가 실렸다. 다른 의제에 대한 만화도 만들었다. 이런 형태의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다.

(사회) 좋은 토론이었다. 여러분들이 TUED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도움이 되는 의견도 많았다. 손 동지가 회의를 소집, 보고서 작성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로자룩셈부르크재단이 TUED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적자원도 많이 투여하고 있다. 재단상근자들이 보고서를 편집하고 교정하고 디자인하고 있다.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TUED는 참여하는 노조의 네트워크이다. 바로 당신들이다. 우리는 연구소 성격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동지들이 다른 활동을 해주셔야 한다. 또 후원도 해야 한다. 내년에 국제회의 다시 할 것이고 국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 9월 22일 TUED 코디네이터 손 스위니 간담회

(손 스위니) 발표 준비해줘서 감사하다. 우리 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필요하다.

(한국참가단)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으면 한국 노동조합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손 스위니) 두 가지가 이다. 하나는 왜 기후변화가 노동자 의제인지에 대한 것이다. 다른 것은 간호사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당연히 제공할 것이다. 국제간호사노련 11개국에 있는데, 한국도 가입되어 있나? 한국에서 필요한 교육자료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참가단) 기후변화, 에너지민주주의, 민영화 세계 사례 등이 필요하다.

(손 스위니) 몇 달 후에 교육자료가 나올 것인데 포스터나 팩트시트이다. 번역에 도움을 주겠다.

(참가단) 노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환경단체는 시장주의적 접근도 하고 있다. 시장이 아니라, 자본이 아니라, 노조 입장의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손 스위니) 한국에서 민영화를 지지하는 논리가 환경적인 논리인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나? 최근 보고서 중 하나는 그리스 시리자 재생에너지 도입 공약에 관한 것이 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적 소유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추진하다가 신자유주의적 재생에너지 도입이 실패한 사례이다.

(참가단) 독일 영국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소기업 성공 사례가 있다. 전력판매 시장 개방을 주장한다. 영국 독일은 배전망 판매 이미 민영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손 스위니) 예측한 답변이었다. 민영화 저지 투쟁에 환경적인 내용을 포함 시키면 우리 주장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철도가 그렇다. 재생에너지 이야기하면 조합원들 긴장할 수 있는데, 이 전환이 장기적인 과정이고 작은 전환도 이삼십년 걸릴 수 있고 일자리 보장되고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노조가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패키지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서 토론을 활성화시키자.

(참가단) 민영화 반대 설득할 때, 국가가 운영해야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환경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손 스위니) 그런 논리가 아직 유효하다. 두 가지 추가하자면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덴마크와 독일이 중요한 사례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덴마크는 풍력 비중 매우 높는데 국유화일 때 한 것이다. 민영화 자유화 된 이후에는 풍력 도입이 더 이상 늘지 않았다.

한국은 그리스와 비슷하게 화석연료 모두를 수입하고 있다. 그리스는 매우 안 좋은 석탄을 쓴다. 시리자에도 석탄 계속 써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노동자 일자리 요구해야 한다.

(참가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기업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참가단) 공기업에 쿼터를 주는 방식이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공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손 스위니) 미국 사례 소개하겠다. 지난 50년 동안 괜찮은 사례 별로 없는데 하나가 있다면, 정의로운 전환 표현 만든 사람이 원자력 노조 위원장이었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무기 노동자 전환하는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주장해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많이 변했다. 반면에 화석연료 기업의 노조는 그러지 않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조에게 불편한 입장일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의 자살이다. 캐나다 유니포의 사례도 있다. 타르샌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데 노조가 타르샌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원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는 국내에서 해야 하고, 그 이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 냈다. 실행 가능성이 당장은 없지만 국민 원주민 입장에서 노조의 이미지 개선되고 존중된

다.

(참가단) 원자력 사례 자료 요청한다.

(손 스위니) 찾아보겠다. 원자력에 대한 개입 입장은 원자력 완전히 폐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존재하는 원자력은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개인 입장이다.

(참가단) 한국 국제 경제 남반구, 북반구도 아닌 독특한 위치다. 국내 환경운동 특히 기후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적 맥락과 달리 거의 없다. TUED 보고서 한국에 소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미 3개의 보고서가 초벌 번역되었고, 에노사가 다양한 번역 사업을 기획 중이다. 공식적인 TUED 재정이 어렵다면 우회적으로 가능한 방법 찾고 싶다. 한국의 사례도 TUED에 좀 소개하고 싶다.

(손 스위니) 지금 재정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로자룩셈부르크 재단 지원 없으면 운영 안 되는 상황. 북반구 노조 지원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을 통해서 국제노총이 재단을 통해 번역작업이 지원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닌가.

(참가단)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노동자 현실 고민 반영해서 좋았다. 현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등을 통해서 적극 결합 방안 찾아보겠다.

(참가단)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속에서 중요한 활동 고맙고 계속해서 많은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

4. 기후변화와 총체적 무대응 : 노동조합의 새로운 관점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워킹페이퍼 2

목 차

기후 변화와 총체적 무대책	과학과 연대
노동조합의 새로운 관점	목표 실행: AFL-CIO
바르샤바: 시작의 끝	코펜하겐의 대실패: 그리고 그 후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 프로세스	개발도상국의 배출
시장에 대한 믿음	배출 적자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	계획적 변환의 필요성
녹색경제와 UNEP	‘생태적 현대화’의 위기
대침체와 녹색대안	노동조합과 새로운 담론
	‘체제 변화’에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손 스위니(Sean Sweeney)가 작성했다.
에너지민주주의를위한노동조합(TUED, 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이
로자룩셈부르크재단(Rosa Luxemburg Stiftung) 뉴욕사무소와 코넬대학
세계노동연구소(Global Labor Institute)와 협력하여 2014년 9월에 발행했다.
독일 연방 경제협력 개발부(BMZ)의 후원을 받았다.

책임의 한계:

이 문서는 저자 손 스위니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이 문서에 표현된 의견은 TUED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정책 및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서는 논의 및 토론을
위해 제공된 것이다.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는 지구적인 행동이자, 여러 부문이 함께하는 행동으로
에너지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을 발전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빈곤, 인간과 대지 모두가 황폐화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려고 한다.

www.energydemocracyinitiative.org

이 문서는 이제 막 노동조합에서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려고 하면서, ‘이제까지의 이야기’에 대해 아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느끼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위해 작성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문서는 노동조합이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와 제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도와서, 조합원의 참여를 늘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노동조합은 여기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만드는 과정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나온 배울만한 점을 실천적인 측면과 아이디어 및 핵심적인 이론적 가정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된다.

이 문서는 노동조합이 활동에 적용하기에 매우 중요하고, 조사해볼 가치가 있는 국제연합(UN) 차원의 내용에 초점을 둔다. 이후에 다룰 내용을 통해 국제 노동조합 운동의 기후변화 정치가 교착상태에 있으며, 이는 지구적인 기후협약을 위해 투쟁해왔지만 지금은 희망이 무산된 다른 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헛다리를 짚었다거나,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이상의 문제이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이었던 ‘녹색경제’의 틀은 정치적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이는 UN 차원에서는 명백하며, 민족국가 차원에서도 한두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정치권과 기업체들이 상상했던 녹색경제로의 이행은 한때는 불가피해 보였으나, 지금은 불가능한 것에 가까워졌다.¹⁾

노동조합이 UN 기후프로세스(협상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1990년대 초 ‘시장의 승리’라 불리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시기부터, 여전히 세계의 많은 지역이 대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한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현재 시점까지, 노동조합의 논의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되돌아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노동조합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물론 노동조합은 지금도 여전히 공격받고 있기에 매우 방어적이다. 하지만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최근 몇 년간 기후 및 환경적 관점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정치가 자본주의의 체계적 속성이자 근본적으로 지속불가능한 특징인 무한한 성장, 축적, 소비 같은 것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총체적 무대책’ 속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1) Achim Steiner. “The green economy is, in the end, inevitable.” presentation.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Global Summit. 2010.

질문을 핵심적으로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

바르샤바: 시작의 끝

2013년 11월 21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UN 기후회담에 참가한 국제 노동조합 대표단이 몇 개의 주요 NGO와 함께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는 2009년 말 코펜하겐에서의 형편없는 UN 기후회담 이후, 기후변화협상이 모든 측면에서 전혀 진전이 없고 야망도 없을 뿐 아니라 성실함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표현하는 항의 행동이었다. 몇 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 끝이 없던 회담 후에 UN 기후프로세스는 이제는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잇는 새로운 기후 협약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 ‘2차 의무이행 기간’을 향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식의 언급이 주요 회담 이후 매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증가하여 이산화탄소 수준이 1990년보다 60퍼센트 더 높다는, 지구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통계치를 숨기진 못한다.²⁾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이하 IPCC)³⁾이 제시한 배출 감축 시나리오 - 지구온난화 수준을 2000년 기준보다 섭씨 2~2.4도 내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5퍼센트 감축해야 한다는 시나리오 - 는 20여 년 전에 시작된 UN 기후회담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치적인 현실에서 멀어졌다.

오늘날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행동하도록 하고, 노동운동의 기본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사회운동과 동맹을 구축하는 새로운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담 자체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지만 이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 노동조합은 페루 리마에서의 2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 COP 20)과 프랑스 파리에서의 COP 21 ‘내부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는 각국 정부에게 매우 높아진 대중의 분노와 분개를 보여주어, 이들이 기후 위기를 다룰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국제노총(ITUC)은 각국 정부 협상단이 2015년 말 파리에서 회담을 하기 전까지 구속력 있으면서 높은 목표를 지닌 국제기후협약에 대해 대중적 지지를 만들라고 각국 노동조합에 촉구했다. 국제노총 사무총장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는 바르샤바 협상장에서 퇴장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일어난 일

2) “Global carbon emissions set to reach record 36 billion tonnes in 2013.” Tyndall Center for Climate Change Research. 2013

3) B. Metz, O.R. Davidson, P.R. Bosch, R. Dave, and L.A. Meyer, ed.,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이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켜서, 민중이 이끄는 기후운동의 기초가 될 것이다.”⁴⁾

‘아래로부터의 압력’ 전략으로의 변화는 노동조합에게 명백한 여러 과제를 제기한다. 10년 넘게 노동조합들은 목표가 명확한 로비를 해왔는데, 이는 수십 명의 노동조합 대표들의 헌신과 끈기를 요구했다. 이 대표들은 국제노총과 그 지역조직이 유럽노총(ETUC), 국제산별연맹(GUFs), 각국 노총, 개별 노동조합과 함께 모은 이들이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명백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이익과 관심이 교토의정서를 뒤이을 새로운 국제기후협약의 내용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기후협약의 ‘노동자 조항’은 협약이 성사되어 실제 협약이 존재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찌되었건 국제노총이 제안한 새로운 방향은 각국 노총들과 개별 노동조합의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이 방법과 전술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현 상황은 계획과 전략의 방향 전환도 요구한다. 국제노총과 북반구의 노총들에게는 사회적 파트너십과 사회적 대화가 여전히 ‘현대적인’ 노동조합주의를 정의하는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방향성은 1957년 유럽노총을 설립하게 한 로마조약(118B조)의 핵심 원칙인 대화와 파트너십을 제도화한 유럽노총의 진화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둔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정치가 시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회민주주의의 믿음과 일치한다. 이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계획할 수 있으며’ 집단교섭 및 사회연대와 같은 노동조합이 우선시 하는 것들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인 경제의 특징의 일부로,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총체적 무대책’은 노조가 경제 민주주의와 대중 권력에 근거한 새로운 의제 및 프로그램과 결합한 운동을 만들고 동맹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파트너십을 대체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UNFCCC(기후변화협약)와 교토프로세스

1990년대 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늘어났다. 1992년

4)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War-saw farce provides one more reason for mobilizing on climate change.” 2013.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대한 UN 회의는 최초의 ‘지구 정상회담’으로 널리 알려진 중요한 이정표이다. 1992년 UNFCCC의 채택은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를 기후시스템에 대한 ‘위험한 간섭’을 막는 수준으로 안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지구적 차원의 정치적 구조를 만드는 단계로 이끌었다.

1995년 최초의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가 베를린에서 열렸다. ‘당사자’는 UNFCCC의 가맹국 정부들이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는 격렬한 협상 후에 대표들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양적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는 의정서에 합의했다. UNFCCC 부록1 당사자인 부유한 국가들은 2012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의 5.2퍼센트 이상을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UNFCCC 교토프로세스의 진보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인정하고, 선진국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형평의 원칙’이었다. 이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와 배출 수준을 다룰 공통의 책임이 있지만,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룰 역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부유한 국가는 세계 인구의 20퍼센트만 차지하지만, 현재 연간 온실가스 중 60퍼센트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이들 나라는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는 오늘날 기후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앞으로 100년간은 더 영향을 줄 것이다. 1950년 이래로 미국은 약 507억 톤의 총 누적 탄소를 배출한 반면, 인구가 4.6배인 중국이나 인구가 3.5배인 인도는 각각 157억 톤과 42억 톤을 배출했다.⁵⁾

UNFCCC와 교토프로세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개발도상국이 배출 목표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한 후 보다 장기적으로 배출을 감축하는 동안, 선진국이 (먼저) 배출을 감축한다는 가정 위에 구축되었다. 선진국은 저탄소 기술의 이전 및 재정적 보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부유한 국가들은 이미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가뭄이나 폭풍우, 질병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가난한 국가에 대해 ‘생태부채’를 지고 있다.

시장에 대한 믿음

5) Data summarized from the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 See: http://cdiac.ornl.gov/trends/emis/meth_reg.html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UN기후프로세스는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직후, 재정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시장에 대한 보호의 제거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강화되었던 ‘시장의 승리’ 기간 중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지구적 수준의 기후보호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와 시장에 기반을 둔 제안들로 넘쳐났다. 배출 감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된 3개의 ‘교토메커니즘’에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유한 국가의 정부가 매년 외국 원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메커니즘은 사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시장이 마술을 부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큰 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배출권거래제(탄소거래제도)이다. 다른 두 가지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이다. 이 메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이 보고서에서 다루기 힘들다. 다만 노동조합이 이 메커니즘 자체나 그 이면의 더 깊은 이데올로기적 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정부들이 리더십이 요구될 때 인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그 좋지 못한 결과를 다룰 세계적인 풀뿌리 운동이 필요하다.”

-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UNFCCC가 이미 자리잡고, 교토의정서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이 협상에 참여했다. 노동조합은 배출 감축 및 기후 보호에 대해 일반적인 시장 기반 접근법의 문제를 강조하는 대신, 회담에서 노동조합의 분명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폭넓은 메시지와 일관된 내용으로서, 노동조합은 벨기에 노동조합들의 요구로 개발된 벨기에 정부의 사회적 기준을 예로 들면서 CDM 및 JI 프로젝트와 같은 것을 승인할 때 ‘사회적 차원’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⁶⁾ 게다가 노동조합은 탄소거래나 다른 재정적 메커니즘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기업과 정부, 노동조합을 결합시키는 기후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했다. 의미심장하게도 UN 회담에 참석한 몇 안 되는 노동조합 중 대부분은 EU 및 지구적 다자간 절차에 대한 핵심적 접근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파트너십을 중

6) “The Trade Union Statement to COP12/MOP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airobi, Kenya. 2006.

심에 두는 유럽의 노동조합들이었다.

초기의 COP에서 노동조합에게 주요한 과제는 기업과 NGO뿐 아니라 정부와 같은 다른 참여자로 가득 찬 장소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오늘날에도 여전한 과제다. 2003년까지 COP에 참석하는 노동조합원의 수는 한자리 수였고, 그 대부분은 정보 수집과 참관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COP4에서는 국제노총의 전신인 국제자유노총(ICFTU)이 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와 함께 여러 시나리오 별 고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배출 감축 전략의 성공은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주가 작업장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세계 곳곳의 공동체의 다른 수단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촉진하는데 참여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계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기후정책이 초래한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였고, 모든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소득 보호, 재고용 기회 보장, 교육, 그리고 재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이 기후 보호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⁷⁾

2006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COP12에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여타 특별 파트너십 합의와 함께 노사 간 ‘목표 설정, 모니터링, 지속적 기록, 이행’을 포함하는 작업장 수준의 배출 감축 계획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에너지 보전, 차량에서의 연료 효율 기준, 녹색건설 방법 및 규제, 보다 효율적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풍력, 태양력, 여러 형태의 바이오매스, 초소형 수력 에너지뿐 아니라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청정석탄’, (대중교통 포함한) 선진 기술 차량,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청정, 녹색,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믹스에 대한 투자’도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발전소와 탄소집약적 산업에서 열병합발전(CHP) 및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은 새로운 기술도 요구했다.⁸⁾

2007년 유럽노총은 기후 보호 정책에 의해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될 수 있으며, 저탄

7) See, for example, Canadian Labour Congress. “Just Transition for Workers During Environmental Change.” April 2000.

8) “The Trade Union Statement to COP12/MOP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airobi, Kenya. 2006.

소 EU경제로의 전환에서 직업훈련과 기술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탐구하는 연구를 의뢰했다. 이 연구는 기후 보호 정책의 결과로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⁹⁾ 따라서 노동조합이 세계무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활동한 초기에는 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이 메시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의 정책 담론 속에서, 노동조합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어찌되었건 과학은 명확했으며 배출 감축이 시급하게 필요했고, 이는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2007년 발리에서 열린 COP13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의 수가 22개국 91명¹⁰⁾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노동조합에게는 협상의 공식적 참관인 지위가 주어졌다. 노동조합의 주된 메시지는 계속해서 일자리였다. 2008년 포츠난에서 열린 COP14¹¹⁾에서 노동조합은 ‘녹색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여 배출 감축이라는 과제가 재생에너지 부문(풍력, 파력, 조력, CHP, 태양광)뿐 아니라 저탄소 차량 및 탄소포집저장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했다.¹²⁾ 노동조합은 또한 ‘작업장의 녹색화’와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작업장 문화 배양을 이끄는 정책을 요구했다. 국제노총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녹색경제와 UNEP

노동조합이 UNFCCC와 교토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조합과 유엔환경계획(UNEP) 간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2006년 1월 UNEP이 국제노총(당시에는 국제자유노총)과 함께 나이로비에서 노동과 환경에 관한 최초의 노동조합 회의를 조직했다.¹³⁾ 2007년에는 UNEP이 국제노총,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사용자기구(IOE)와 함께 녹색경제계획(Green Economy Initiative)을 출범시켰다.

이 파트너십은 국제노총과 국제노동기구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한 입장과 일치했으며, UNEP의 지위와 영향력은 이러한 메시지를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정책

9)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Instituto Sindical de Trabajo, Ambiente y Salud (ISTAS), Social Development Agency (SDA), Syn- dex, Wuppertal Institute. “Climate Change and Employment: Impact on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25 of climate change and CO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by 2030.” 2007.

10) ITUC. “Trade Union Action on Climate Change.” 2008.

11) ITUC, CSI, IGB. “Trade unions and climate change: Equity, justice &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12) ETUC, et al. “Climate Change and Employment.” op cit. 2007.

13)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o Host First Assembly on Labour & the Environment.” 2005.

을 형성하고 촉진하는 역량도 증대시켰다. 국제사용자기구의 참여는 정치적 장식이었을 뿐이었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 또한 UNEP는 녹색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핵심 주제와 관련한 노동조합원의 훈련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했다. 이는 스페인의 좌파 노총인 노동자위원회(Comisiones Obreras)와 역사적으로 연결된 단체이자 마드리드에 소재한 지속가능노동재단(Sustainlabour Foundation)이 수행했다.

이 파트너십은 2008년 월드와치(Worldwatch)연구소와 코넬대학교 세계노동연구소가 작성하고 UNEP이 발간한 《녹색일자리: 지속가능한 저탄소 세상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해》라는 400페이지에 달하는 지구적 녹색일자리 연구를 결과물로 내놓았다.¹⁴⁾ 이 연구는 배출 감축 및 여타 녹색 계획에 대한 과학에 기반을 둔 공격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북반구와 남반구의 주요 경제 부문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¹⁵⁾ 이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녹색경제를 완전히 수용하도록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완전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가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지금에 와서는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다.

대침체와 녹색 대안

2008~2009년에 금융 위기와 ‘대침체’가 시작되자 노동조합과 그 동맹 세력은 증가하는 실업과 하락하는 생활수준에 대응할 수단으로 녹색 투자와 녹색 전환을 더 강하게 주장할 역사적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¹⁶⁾ 2009년 초 호주 수상인 케빈 러드(Kevin Rudd)는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한 방식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이 왔으며 사회민주적인 정치적 경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면서 ‘체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다.¹⁷⁾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도 ‘녹색 뉴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¹⁸⁾

14) Michael Renner, Sean Sweeney, and Jill Kubit.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Worldwatch Institute. 2008.

15) “We know what works and what types of ac-tion are needed. Green jobs are emblematic of a low-carbon and sustainable future, and it is imperative that decisive action be taken now to advance their growth and to remove all ob-stacles in their path—whether those obstacles take the form of insufficient investments, irre-sponsible consumption, or the blind impera-tives of competition and profit.”

16) Joseph Stiglitz, Sharan Burrow, John Evans, et al. “Exiting from the crisis: towards a model of more equitable and sustainable growth”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2011.

17) Kevin Rud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onthly. Feb. 2009.

18) “Ban urges leaders at Davos to forge ‘Green New Deal’ to fight world recession.” UN News Centre. 2009.

이 시기 노동조합은 녹색경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녹색 투자를 수요의 측면, 보다 명확히 말하면 케인스적인 프로젝트로 여기고 전후 유럽과 북미의 ‘사회 계약’ 노동조합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가치를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에 녹색경제의 틀은 퇴색되고 있던 삼자 조합주의,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파트너십이라는 사명을 다시 활성화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호주의 탄소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녹색성장협정과 2009년 오바마의 경기부양 패키지에 들어간 녹색 정책과 같은 것이 갈채를 받았고, 녹색케인스주의의 시대가 시작되려는 징후로 보였다. 독일 재생에너지 개발은 “정책, 규정, 투자는 어떻게 투자가 녹색경제를 추진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었다.¹⁹⁾

노동조합들은 녹색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에서 이것이 수요를 다시 만들고, ‘모두를 위한’ 성장을 창출하며 사회적 대화를 촉진한다는 말을 사용했다.²⁰⁾ 2012년 6월 리우+20 정상회담에서는 몇몇 노동조합이 강력한 금융 규제와 투기 억제,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²¹⁾ 이는 본질적으로 녹색경제의 사회민주주의적 판본으로서 노동자의 권리, 괜찮은 노동,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중심적인 성장, 정부와 공공부문의 강력한 역할, 녹색 전환을 용이하게 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게 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을 제공했다.²²⁾

그러나 녹색경제에 대한 UNEP의 시각은 항상 민간 부문 참여자에게로 편향되어 있었다. UNEP가 기후변화와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육에 지원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UNEP에게 노동조합은 ‘시민사회 파트너’의 긴 목록 중 하나였고, 노동조합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녹색 성장의 메시지 속에서 사라지곤 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정치가 우를 향하면서, 신케인즈적인 녹색 서사에 대한 역풍이 강하게 불자, UNEP는 아무런 문제없이 초점을 민간 부문 투자자와 시장으로 옮겼다. UNEP의 견해는 녹색자본주의의 주요 옹호자이며 2006년 《기후변화의 경제학: 스텐 보고서》를 쓴 스텐의 견해와 사실상 같았다. 스텐은 기후 친화적인 녹색자본주의의 발전은 정책적으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탄소시장이 될 배출거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결론 내렸다.²³⁾ 스텐은 “민간 부문의 행동을

19)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Growing Green And Decent Jobs.” 2012.

20) Andrew Watt and Andreas Botsch, eds. “Exiting from the crisis: towards a model of more equi-table and sustainable growth.”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ETUI). 2011.

21) Anabella Rosemberg. “Rio 20: Trade unions submit their proposals for the Summit.”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2011.

22) This perspective has been represented in numerous trade union documents, statements, and resolutions. For example, see: Sharan Bur-row. “No Social Justice Without Environmental Protection.”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2012.

촉진하려고 하는 강한 기술 정책”에 대해 우려했다.²⁴⁾ 오늘날 UNEP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오늘날 더 크게 말하면서, 이 문제에 여전히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를 다룰 통로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비용 효과적인 조치의 선택 폭이 이렇게 풍부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²⁵⁾

과학과 연대

이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주로 녹색경제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2007년 말 발리에서 열린 COP13에서 노동조합은 UN 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다른 주요한 이슈에 대해 더 뚜렷하게 강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대한정부간패널(IPCC)이 제안한 과학에 기반을 둔 배출감축목표였다.²⁶⁾ IPCC는 UNFCCC가 사용하는 과학기술 정보의 가장 중요한 출처였다. 동료 심사를 거친 2천 건의 과학보고서에 기반해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IPCC는 2007년 4차 평가검토서를 발행했고, 발리에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수천 명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당시 IPCC 의장이었던 라엔드라 쿠마르 파차우리(Rajendra Kumar Pachauri)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지구 기후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즉각적으로 강력한 연설과 행동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게 했을 뿐 아니라, 중대한 전환점(Tipping Point)과 기후격변,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노동조합은 COP13에서 채택된 공식적인 ‘발리행동계획’을 지지했다. 이는 배출의 급격한 감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IPCC의 제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IPCC에 따르면 선진국이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40퍼센트를 감축해야 했는데, 이는 엄청난 일이다. 새롭게 논의되고 있던 새로운 국제협약의 기한은 발리 이후 정확히 2년 후인 2015년으로 설정되었다. 국제노동총연맹은 발리에서의 목표와 IPCC 의 제안을 ‘새로운 노동조합 국제주의’를 결집시킬 구호로 보았다.²⁷⁾ 유럽노동총연맹은 COP13 동안 노동조합들의 절박감을 포착했다.

“우리는 2년 후부터 조치를 취할 만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발리의 합의가 진지한 세계적인 약속의 시작이 되기 바란다. 어려운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²⁸⁾

23) Nicolas Ster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4) Renner. op.cit.

25) Achim Steiner, et al. Bridging the Emissions Gap. UNEP, 2011.

26) B. Metz, et al. op. cit.

27) ITUC submission to the UNFCCC welcoming Bali Action plan, n.d. (circa Jan. 2008).

목표 실행: AFL-CIO(미국노총)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해 더욱 더 관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IPCC의 목표가 노동운동 내에서 약간의 논란을 겪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제노총은 2020년과 2050년까지의 IPCC의 목표를 반영하는 과학에 기반한 배출감축목표와 기후 정책을 위해 일관성 있게 투쟁해왔다. 하지만 모든 노동조합이 여기에 함께하지는 않았다. 논쟁을 거치는 동안 국제노총은 (대부분 AFL-CIO의 지부로부터 나온) 2020년 목표(하단 참조)를 폐기하라는 압력에 맞섰다. 국제노총은 이 야심 찬 목표가 녹색 투자 및 녹색 일자리를 위한 제공할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압력을 물리쳤다. 국제노총은 과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통해 남반구의 노동조합 및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도 유지할 수 있었다.

왜 일부 노동조합은 이러한 목표에 반대했는가? 가장 반대에 앞장 선 것으로 보이는 AFL-CIO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쟁력과 석탄이라는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진 쟁점이었다. AFL-CIO는 미국에는 배출 감축을 요구하면서, 중국과 같은 산업경쟁국은 면제해 준 조약은 재고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여(1인당 배출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은 생각치도 않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매우 강경하게 반대했다.²⁹⁾ 2008년 포츠난에서 열린 COP14에서 AFL-CIO는 또다시 목표와 일정에 대해서 국제노총과 의견을 달리했다. 국제노총은 선진국 정부에게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25~40퍼센트를 감축하라는 IPCC 목표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AFL-CIO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할 수 없었고, 특정한 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자신들만의 성명을 만들었다. 국제노총에 보낸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AFL-CIO는 제안된 (IPCC) 목표와 결정적인 기술, 즉,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이용 가능성 사이에 부조화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³⁰⁾

28)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Bali: ETUC welcomes roadmap but regrets failure to agree emissions targets.” Dec. 18, 2007.

29) AFL-CIO Executive Council Statement on US Energy Policy. Feb. 17, 1999.

30) AFL-CIO memo to ITUC: “The (2020) target discussion has been troublesome and has led to serious disagreements (between the AFL-CIO and the ITUC). It is also directly related to the level of commitment to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s, and an integrated approach to a climate change regime. We share the concerns and apprehension that other unions have expressed over this topic.”

이는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이 시점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상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는데도, AFL-CIO가 ‘청정 석탄’에 대해 몰두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³¹⁾ 코펜하겐 COP15가 열리기 한 달 전 오바마 행정부는 2005년 수준으로부터 17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배출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다시 말해 1990년을 기준으로 4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IPCC가 1990년 수준으로부터 25~40퍼센트를 감축하도록 권고한 것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부의 펜 하나를 휘둘러서 기준을 1990년에서 2005년으로 바꿔서, 1990년 이후 미국의 배출이 16퍼센트나 증가한 것을 보이지 않게 했다. AFL-CIO는 오바마의 17퍼센트 목표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발전 및 제조 부문 같은 탄소집약적 부문의 노동조합이 미국 노동조합의 기후 정책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급 전쟁이다. 백만장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돈을 위한 안전한 천국을 만드는 반면에 세계의 가장 가난한 인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기후변화의 대가를 치른다.”

- 지르키 라이나(Jyrki Raina), 국제통합제조산업노련(IndustriALL) 사무총장

코펜하겐의 대실패? 그리고 그 후

발리행동계획은 2009년 말 열릴 COP15를 2012년 교토의정서 만료 후 새롭게 발효될 새로운 국제기후협약이 협상될 목표일로 잡았다. COP15에서 기후운동은 처음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였다. 십만 명이 넘는 사람이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의 변화를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 중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수백 명에 불과했다. UN 프로세스가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 것이라 확신하고, 기후 회담에 대해서 덴마크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한 덴마크 노동조합은 공적인 UNFCCC 이외에 시위나 민중 기후포럼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400명의 국제노동총 대표단과 프랑스, 벨기에 노동조합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여타 유럽 지역 노동조합의 관심을 꺾는 일이었다.

하지만 COP15는 미국과 다른 주요국 정부들이 ‘코펜하겐 합의’라 불리는 6페이지의 메모를 제시하면서 대실패로 끝났다. 이 메모의 주요 전제는 첫째, 의무적인 배출감축

31) Eugene M. Trisko. “Economic and Public Health Benefits of Coal-Based Energy.”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Brief Analysis No. 573. Sept. 27, 2006.

목표는 협약의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며 둘째로, 자율적인 이행 약속만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는 UNFCCC를 되돌리기 힘든 위기로 빠트렸다. COP15가 열린 다음 달, 각국은 자발적인 목표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놀라울 것도 없이) IPCC의 배출감축제안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약화된 것이었다.

코펜하겐 합의는 회담에 참여한 400명의 국제노동조합 대표단에게 이중으로 타격을 주었다. 첫째, IPCC의 과학에 기반한 목표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에 반영된 형평의 원칙이 의무 목표와 함께 모두 버려졌던 것이다. 녹색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것이 UNEP식의 시장에 기반한 판본이건, 노동조합의 신케인스주의 모형이건 간에 모두 높은 목표를 지닌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에 기댄 것이었다. 의무적 배출감축목표가 없다면 녹색경제는 미미할 것이기에 COP15는 재앙이었다. 둘째, UNFCCC는 COP15를 준비하면서 2009년 6월에 발표한 ‘협상 본문’의 ‘장기적인 협력적 행동에 대한 공유된 전망’ 부분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내용을 수용했다.³²⁾ 노동조합 대표들은 이 표현이 유지되어 새로운 국제협약에 포함될 것으로 낙관했지만 코펜하겐 합의는 이러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제노총의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AFL-CIO가 코펜하겐에서 보낸 보고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이 보고에서 AFL-CIO는 미 국무성 및 그 협상팀과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AFL-CIO의 대표단장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경계 조정이나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앞선 개발도상국들의 배출목표설정에 대한 참여, 그리고 배출 감축 검증의 투명성과 같은 미국 노동조합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무성의 협상자들과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AFL-CIO와 환경 및 사업 조직들은 미국 정부의 협상 입장을 지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모든 준비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³³⁾

미국의 노동조합 및 환경단체의 연합인 블루그린동맹(Blue Green Alliance)도 주요 경제권이 모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코펜하겐 합의에 갈채를 보냈다.³⁴⁾ 그러나 국제노총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32) UNFCCC,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Bonn. June 1-12, 2009.

33) AFL-CIO. “Report from COP 15: The AFL-CIO, ITUC and the Copenhagen Accord.” Unpubl.

34) Leo W. Gerard, Michael Brune, David Foster, et al. Open letter to Todd Stern, Special En-voy for Climate Change U.S. Department of State.” Blue Green Alliance. June 4, 2010.

“미국이 약속한 낮은 배출감축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적응을 위한 자금 지원에 엄격한 조건부로 최소한의 지원을 약속한 것,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 30퍼센트로 감축하는데 무능력했다는 것, 모든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교토의정서의 두 번째 의무이행기간에 합의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것, 이 모두와 연관되어 신흥 경제에 대해 불신과 보수주의의 환경을 강화했다.”³⁵⁾

개발도상국의 배출

기후변화 문제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코펜하겐 회담에서 주요하게 던져진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발도상국의 배출 이력과 새로운 협약에서 개발도상국의 이행 약속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1990년대 초 이래로 부유한 나라의 산업경쟁국이었던 개발도상국에서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정치를 상당히 변화하게 했다. 중국은 현재 가장 큰 배출국이다. 2011년 세계 연간 온실가스(GHG) 배출의 29퍼센트가 중국에서 나왔으며, 미래의 배출 증가량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특히 BRIC과 대형신흥경제(BEES)에서 나올 것이다.³⁶⁾

기후협상에서 의무적 배출감축요건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아래 주장에 의지하고 있다. 중국은 1인당 배출이 아직 선진국보다 낮은 개발도상국이다. 중국은 국민에게 ‘발전’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많은 선진국보다 더 배출 추세를 통제하고 있다.³⁷⁾

그러나 이는 중국의 배출의 40퍼센트가 단지 35개 도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2008년 상하이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7톤이고 북경은 연간 12톤이다. 이는 동경이 1인당 6톤, 런던 및 뉴욕이 1인당 7톤을 배출한다는 것과 비교된다.³⁸⁾ 2009년 중국의 불평등 수준은 미국을 넘어섰다.³⁹⁾ 왈든 벨로(Walden

35)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COP15 Evaluation & report on trade union activities.” Feb. 15 2010.

36) For a discussion on China's rising emissions, see “The East is Grey.” The Economist. Aug. 10, 2013.

37) Giles Parkinson. “China Emissions Cap Proposal Hailed as Climate Breakthrough.” RenewEconomy. May 22, 2013.

38) Shobhakar Dhakal and Owen Gaffney. “Track-ing China's Urban Emissions.” Global Change 74 (2009).

39) Damian Tobin. “Inequality in China: Rural poverty persists as urban wealth balloons.” BBC News. June 29, 2011.

Bell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이해가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게 되었다. 이 두 탄소 범죄자들은 협상에서 반대자들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기후 협약의 성취를 가능한 한 늦추고 그 협약을 가능한 한 약화시킬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⁴⁰⁾

배출 적자

2010년부터 현재(2014년 1월)까지의 기간은 주요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 야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2010년 미 의회가 기후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코펜하겐 합의 하에서 그나마도 허약한 배출감축약속(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퍼센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뜻했다. 이러한 현실은 다른 주요국 정부들이 결국 합의에 따라 자신이 한 약속을 철회하게 했다. 이 합의를 통한 선진국의 약속이 (기껏해야) 2020년까지 1990년 배출 수준의 16퍼센트 감축에 해당하며, 이는 지구가 2100년까지 섭씨 3~5도만큼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⁴¹⁾, 어떤 이들은 이 합의를 협상의 역학에서 필요했던 변화라며 환영하고 있다.

각각 칸쿤과 더반에서 열린 COP16(2010년)과 COP17(2011년)에서는 약 200명의 노동조합 대표가 모였지만, 도하의 COP18(2012년)과 가장 최근에 열린 바르샤바의 COP19(2013년)에서는 여기서 크게 감소한 약 50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칸쿤에서 협상은 겨우 살아날 기미를 보였다. 국제노총의 행동은 각국 정부들이 이후 협약의 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협상 본문 초안에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양질의 일과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했다. 가난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배출 추세를 낮추도록 돕기 위한 기금의 출범도 많이 논의된 이슈 중 하나였지만, 이후의 COP에서 이 분야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3년 11월 바르샤바 회담이 열릴 때, 교토의정서를 뒤이을 국제기후협약은 이전보다도 더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 2013년 11월 21일, 캐나다와 일본이 코펜하겐 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COP19 국제노총

40) Walden Bello. “The China Question in the Climate Negotiations: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 Sept. 2012.

41) Achim Steiner, et al. Bridging the Emissions Gap. UNEP, 2011.

대표단은 800명의 환경, 청소년, 토착민, 기타 시민사회 집단과 함께 회담장에서 퇴장했다.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기후 금융도 철회했다.

바르샤바 COP19는 기업의 후원을 받은 최초의 UN 기후회의였기에 ‘기업COP’라 불렸다. 11개 기업이 COP를 후원했는데, 기업이 기후 프로세스에 접근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COP에서 퇴장한 많은 사회운동 조직은 프로세스에 기업이 관여한 것이 회담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폴란드 정부는 협상 도중에 석탄 회사들과 수뇌 회담을 열었다. 영국노총(TUC)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들은 일이 끝나기 전에 회담에서 퇴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 바르샤바에서의 UN 회담에서 정부 간 협상은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회담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진보적인 정부와는 로비와 캠페인을 벌이고, 동맹을 구축하고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깊이 분열된 국가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회원들과 공동체로 돌아가서 캠페인을 더 벌이고 대중의 지지와 약속을 시급하게 구축하고 강화하여 정부들이 내년에 다시 만날 때는 반드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⁴²⁾

계획적 변환의 필요성

국제 노동조합 운동은 기후변화에 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UN 회담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투쟁한 많은 노동조합 운동가들은 기후변화가 노동조합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 자신의 조직을 먼저 확신시키려 애써야 했다. 우파가 공격을 하고, 노동조합의 자원에 대해 여러 요구가 많은 시대에 COP에 참석하고 각국 정부가 움직이게 하려 한 ‘기후 임원진(climate cadre)’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지식, 경험, 헌신은 앞으로 다가 올 시기에 노동조합의 가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현 시점은 노동조합이 기후정치의 상황과 1992년 지구정상회담 이후 20년 동안 자본

42) Lara Skinner. “Warsaw Walk Out - What Hap-pened? Union Delegates Speak.” 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Nov. 21, 2013.

주의의 정치경제학이 어떤 것이었나를 살펴보기에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녹색경제’의 틀에서 구하지 못했던 진정한 해법을 찾고 조합원이 행동을 하게 할 새로운 접근법과 계획적 변화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은 우리 모두에게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다”

-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기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조합 중 대부분은 현실에서 역사적인 선택지가 본질적으로 두 가지라는 전제 하에 움직였다. 즉, 인류가 어떤 형태의 ‘모두에게 좋은’ 녹색 자본주의로 이행하거나, 아니면 화석연료 기업과 주요 산업, 농업, 수송, 유통 산업이 이해관계로 인해 ‘늘 그랬듯’ 확장되면서, 생태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를 지나서 ‘자살 자본주의’의 시나리오에 직면하리란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노동조합은 민간 시장이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에 의문을 가져왔으며, 정부가 노동조합의 지원 속에서 전환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여 세계적인 녹색뉴딜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은 그 시기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실용적인 적응이었다.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이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루면서도, 많건 적건 무한정으로 성장하는 걸 계속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또한 불평등이 심해지고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며 여러 나라에서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성장에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회의주의가 늘어났다.

미래를 보면서 온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IPCC의 배출감축 시나리오에 대한 이행약속이다. 앞서 말했듯 모든 노동조합이 기후정책을 이끄는 데 있어 과학이 필요하단 점을 인식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제 노동조합운동은 과학에 기반한 접근법에 대한 이행약속 속에서 결집해왔다. 이것은 진보적인 노동조합의 기후정책에 반드시 들어갈 구성 요소이며, 2010년에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노동총의 총회에서 재확인된 입장이다.⁴³⁾

그러나 과학에 기반한 의제의 완전한 함의는 UNEP과 ILO가 이해하고 있는 녹색경제

43)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Resolution on Combating Change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Just Transition.” ITUC Second World Congress. 21-25 Jun 2010.

의 틀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요구한다. UNEP과 ILO의 접근법은 정부의 역할이 아래와 같다는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에 적응한 것이다. ILO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민간 부문이 녹색으로 전환하도록 격려하고 민간의 가격 신호가 없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공공 투자는 더 큰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⁴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큰 결함이 있으며, 정책의 관점에서 명백히 부적절하다. IPCC의 배출감축 시나리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패턴의 완전한 변환을 요구한다. 과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해법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녹색경제의 틀로는 둘 모두를 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가 있건 없건 간에, 녹색 자본주의가 축적의 새로운 단계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라는 환상을 거부할 때다.

‘생태적 현대화’의 위기

UN 프로세스가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을 국제기후협약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단순히 ‘정치적 의지’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이는 자본주의의 ‘녹색’ 축이 이끌어 나갈 역량이 없다는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다. 녹색 자본주의라는 아이디어는 ‘생태적 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라 알려진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생태적 현대화는 기술적인 효율 등이 경제활동을 ‘비물질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더 적은 물질의 투입으로 더 많은 산물을 만들 수 있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분리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은 방해 받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관점은 어찌면 당연하게도 매우 취약한 근거만 가지고 있다.

생태적 현대화와 녹색 자본주의의 전체적인 이론 틀은 자연자원의 희소성이 이러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쟁력과 성공의 주요한 요소가 되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가정 하에 개발되었다. ‘녹색전환’의 전망에 대한 이 긍정적 평가는 UNEP의 사무총장이 2010년 “결국 녹색경제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한 데서도 엿보인다.⁴⁵⁾

44) ILO/UNEP. “Working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decent work and social inclusion in a green economy.”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Jun. 12 2012.

45) Steiner. “The green economy.” op. cit.

UNEP가 만든 이러한 담론은 낙관주의로 가득하지만, 많은 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새로운 화석연료원이 나타나면서, 필연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새로운 세계 에너지 수요의 50퍼센트 이상이 석탄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정책 하에서는 2035년 전체 에너지 필요량의 4분의 3 이상이 화석연료로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가능한 석탄 매장량은 세계적으로 1조 톤에 이른다.⁴⁶⁾ 현재 약 28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⁴⁷⁾ 오늘날 에너지 기업은 화석연료의 새로운 ‘황금기’가 올 전망에 행복감에 젖어있다.⁴⁸⁾

물론 노동조합 운동가들은 화석연료 기업의 정치경제적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012년 화석연료 기업 및 공기업은 전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 1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로는 48퍼센트 이윤으로는 거의 4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⁴⁹⁾ 화석연료 기업 CEO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 속한다.⁵⁰⁾ 탄소추적행동(Carbon Tracker Initiative)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석유가스 기업이 아직 추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석유 및 가스의 현재 매장량은 2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상위 100개의 석탄 기업과 상위 100개의 석유가스 기업은 2011년 2월 현재 7.42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런던, 상파울로, 모스크바, 호주, 토론토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 중 20~30퍼센트는 화석연료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⁵¹⁾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생태적 현대화와 ‘녹색성장’ 의제의 운명은 자원희소성의 증가로 인해 생겨나는 자본 축적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화석연료가 여전히 풍부하고 수익성이 좋은 상황에서의 정치적 개입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개입에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오염 통제 규제를 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의무적 배출감축 목표와 이를 이행할 일정표가 있는 국제협약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제는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녹색 ‘도전’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업과는 충돌한다. 이 기업들은

46) “Global renewable electricity to grow 3.2% per year.” Focus.com Renewable Energy. May 27, 2010.

47) “The Toll on Coal.” Financial Times. Oct. 1, 2013.

48) World Energy Outlook 2011: Are we entering a golden age of gas? Pari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1.

49) “Fortune Global 500.” CNN Money. 2013.

50) “IFG Programs: Plutonomy, Outing The Oligarchy.”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51) “Unburnable Carbon.” Carbon Tracker Initiative; Bill McKibben. “Global Warming’s Terrifying New Math.” Rolling Stone. Jul. 19, 2012.

엄청난 부와 권력의 집중을 이용해서 UN 프로세스를 포함한 정치를 통제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기후보호 정책이 제안되어도 화석연료 기업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으로 인해 이것이 기각되고 있다. 미국에서만 매년 약 35억 달러가 연방 차원의 로비활동에 투자되고 있다.⁵²⁾ 최근 몇 년간 로얄 더치 쉘(Royal Dutch Shell), 미국상공회의소, 에디슨 전기연구소, PG&E, Southern Company, 엑손모빌(ExxonMobil), 쉘브론(Chevron), BP, ConocoPhillips는 로비스트 상위 20위에 들어갔다.⁵³⁾ 세계적으로 이 기업들은 미국석유연구소, 석유제품캐나다연구소, 호주석탄연합, 남아공에너지다사용자그룹, (유럽기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 유럽철화학산업체연합인 Cefic과 Eurofer와 같은 서로 연결된 거래 협회로 조직되어 있다.⁵⁴⁾

화석연료 기업의 정치경제적 힘과 이들의 ‘통상적인 사업’ 의제를 다룰 정치적 전략을 제안해야 하는 순간, UNEP와 ILO는 대부분 입을 다문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정책 제안은 세계적으로 4천억~6천5백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다.⁵⁵⁾ 이는 긍정적인 진전일 수 있지만, 에너지 자원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어떤 이유로 에너지가 생산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기후정책이 ILO와 UNEP의 녹색경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한 화석연료 기업의 정치경제적 힘과 이들의 ‘통상적인 사업’ 의제에 대한 투쟁은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새로운 담론

점점 더 많은 수의 노동조합과 사회적 운동이 ‘녹색경제’의 틀을 비판하며 지속가능성 및 기후보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담론은 세계의 몇몇 지도자와 거대한 ‘보다 녹색인’ 기업이 상상한 녹색 전환으로는 사회가 직면한 문제나 자연의 체계적인 속성에서 나온 문제의 뿌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한다. 이 담론은 ‘생태적 현대화’와 부수적인 자연의 상품화가 우리가 한 종으로서 직면한 심대한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자연자원’에 가치를 부여하여 자본주의를 녹색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

52) Dana Bash. “Lobbying spending appears to plateau.” CNN Politics. Feb. 4, 2011.

53) 350.org. The U.S. Chamber Doesn’t Speak For Me.

54) “Who’s Holding Us Back? How carbon-intensive industry is preventing effective climate legislation.” Greenpeace International: “Political Action Committees.” OpenSecrets.org.

55) Achim Steiner. “Climate Lecture by UNEP Executive Director Achim Steiner at the Berlin Technical University.”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Nov. 14, 2011.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연의 상품화는 그저 단순히 경제적(따라서 사회적인) 착취, 시장화, 사유화의 새로운 영역을 열 뿐이다. 기존 녹색경제에 대한 경험은 이것이 녹색전환이 아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를 새로운 영역, ‘인클로저(울타리치기)’의 새로운 단계로 연장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세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더 악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담론은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위기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탄소시장과 탄소세를 포함한 규제와 시장기반 접근법은 실패했다. 기업의 권력과 에너지자원, 기반시설, 시장에 대한 통제력에 맞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은 에너지수요 증가, 화석연료 사용 증가, 배출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국제운수노련(ITF)에 의해서 운송에 의한 배출을 다루려는 노력 속에서 발전했다.⁵⁶⁾ 이는 국제노총과 지속가능한노동(Sustainlabour)이 조직한 리우+20 2차 노동환경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400명의 대표들이 격렬한 논의 후에 발표된 성명에서, 지금의 이윤에 기반한 생산, 소비 체계가 바뀌어야 하며, 공공의 것이 지켜져야 하며, 에너지는 공적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⁷⁾ 국제건설노련(BWI)은 “지금의 녹색경제 개념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여러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다루지 못하고 기존 자본주의 구조의 녹색세탁(green wash)”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⁵⁸⁾ 필리핀의 진보노동동맹(AFL)은 아시아의 다른 조직과 연합하여 “자연과 그 모든 구성요소 및 기능의 상업화, 사유화, 금융화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구를 온난하게 하는 배출이 전체적 문제의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모두 다루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 정치적 사회적 해법은 부를 더 공정하게 배분하여 인류의 대부분이 겪는 대량 빈곤, 영양 부족, 실업, 불안정, 나쁜 건강 및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 이것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투쟁이다.”

- 국제운수노련(ITF)

56) ITF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Transport Workers and Climate Change: Towards Sustainable, Low-Carbon Mobility.”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n collaboration with Cornell Global Labor Institute. 2010.

57) “Trade Union Resolution on Labour and Environment.” ITUC. June 11-13, 2012.

58) “Declaration on Rio+20 Summit.” Building Worker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Industries. June 11-14, 2012.

2013년 각국 노총과 국제노총을 포함한 29개 노동조합이 '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네트워크'(TUED)를 출범하기 위해 모였다. TUED는 노동조합과 기타 사회운동 사이에 견고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부터 지구적인 차원에까지 에너지의 공적인 방향 설정 및 사회적 소유를 강력하게 옹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노동조합과 협력 조직들의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⁵⁹⁾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속노조(NUMSA) 및 캐나다 공공노조(CUPE)와 같은 노동조합은 에너지를 공공의 소유로 만들고 이전에 민영화되었던 것을 국유화하려는 노력을 늘리고 있다.⁶⁰⁾

'체제 변화'에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기후변화와 오늘날의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지속불가능한 성격을 다루는 데 있어, 과학에 기반한 접근법과 함께 공적 소유를 다시금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에게 중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접근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없는 UNEP와 ILO는 이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 노동조합의 주요한 동맹도 포함한 - 많은 사회운동은 이미 '녹색경제' (때로는 '탐욕경제'로도 불리는)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공유제'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더욱 급진적인 정책과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 좌파는 '체제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전환의 세부사항은 이론의 수준에서도 매우 불명확하다. 그래도 논쟁과 운동의 구축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다.⁶¹⁾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조합원과 노동자,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59) Sean Sweeney. Resist, Reclaim, Restructure: Unions and the Struggle for Energy Democracy. 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2012.

60) According to CUPE: "We will work to keep energy generation and transmission public and promote public renewable energy, including advocating for bringing energy generation and transmission back into public ownership and control where it has been privatized." See: CUPE.SCFR Working Harmoniously on the Earth, CUPE's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cording to NUMSA: "We believe a just transition must be based in worker-controlled, democratic social ownership of key means of production and means of subsistence... Without this struggle over ownership, and the struggle for a socially owned renewable energy sector, a just transition will become a capitalist concept, building up a capitalist 'green economy.'" National Union of Metal Workers of South Africa. Central Committee Meeting. Johannesburg. December 11-14, 2012.

61) See, for example: "A People's Manifesto: Our urgent common priorities for a democratic, social, ecological and feminist Europe." Alter Summit. Athens. June 7-8, 2013.

이들 운동이 기후변화뿐 아니라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지속불가능하고 불공정한 특성을 모든 범위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한 개입이 무엇인지 명백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법은 그 특성 상 전환적이면서 변혁적이다. 이는 남아공노총(COSATU)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2011년 더반 COP17에 제출한 관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⁶²⁾ 이러한 관점은 경제적 민주주의, 노동자 협동조합, 신용 조합, 상호주의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예정된 파탄으로부터 경제를 되찾아오고,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중기적 목표는 에너지 및 발전, 주요 운송서비스, ‘기후일자리’ 및 공공사업을 통한 에너지 보전, 먹거리 생산, 유통, 소매 부문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소유로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기존 체제 내에서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체제 변화의 추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이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체제 변화의 임계점에 가까워지게 한다.

변혁적 전환의 관점이 명확하다면 조합원을 조직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기후변화를 다른 것과 구별되고 동떨어진 쟁점으로 여기고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노동조합이 구성원과 함께 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민영화와 긴축에 저항하고, 공공서비스를 방어하는 것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기후 보호라는 의제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2013년 초 토론토에서 캐나다제2노총(UNIFOR)이 설립되는 회의에서 활동가이며 저자인 나오미 클라인이 독특한 힘으로 전달한 메시지이다.⁶³⁾ 현재의 투쟁에 기후보호 의제를 넣음으로써, 노동조합은 현재 ‘핵심 의제’로 여이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노동조합은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분명하고 영감이 가득한 대안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온 관심사와 기후문제를 융합시키려는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2014년 9월 뉴욕에서의 기후민중행진과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COP20을 준비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도시와 지역 전체가 2012년 10월 슈퍼 허리케인 샌디에 강타당해 40명이 죽었으며, 몇 달간 피해 받은 지역은 노동계급 주거지였다. 노동조합이 아직 앞장서서 기후운동을 이끌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뒤쳐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62) Patrick Craven. “COSATU Policy Framework on Climate Change: Adopted by the COSATU Central Executive Committee, August 2011.” COSA-TU. Nov. 19, 2011.

63) Naomi Klein. “Why Unions Need to Join the Climate Fight, Speech at the founding convention of UNIFOR.” New Statesman. Oct. 2013.

5. 한국 참가단 발표 자료⁶⁴⁾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경험과 과제

1.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창립의 배경: 민영화 저지 투쟁과 논쟁

1990년대 후반 한국을 덮친 외환위기는 한국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급격하게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부터 IMF와 김대중 정부는 인프라 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에 맞서 발전, 가스 노동조합은 노조 민주화 투쟁과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함께 벌여나갔다. 그런데 한국의 환경운동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환경운동 진영은 발전-송전-배전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국 정부가 한국전력을 통하여 공급 중시, 화력 및 원자력 위주의 전력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은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를 경쟁 구조로 바꾸어야 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전력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일부 환경운동가들이 민영화 정책에 찬성하고, 오히려 노동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반면에 어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환경운동의 주장을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비난했다.

2002년 발전.가스.철도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은 민영화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결국 해당 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이 파업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부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시작했다.

2.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창립과 활동: 에너지 공공성을 위하여

2004년 공공연맹과 공공연맹 산하의 에너지 산업 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에너지대안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이 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토론하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였다.

64) 여기 실린 두 자료는 한국 측의 토론 및 발표 자료로 준비되었으나, 주최 측의 사정으로 토론회가 취소되어 실제 발표되지는 못하고 간담회 등에 활용했다.

여기서는 한국의 에너지 산업 민영화, 방폐장 등의 현안과 원자력 문제,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문제 등이 토론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조금씩 접근할 수 있었고 서로 신뢰를 쌓아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2005년 6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7개의 노동조합(지부), 2개의 환경단체 등이 참여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창립선언문은 창립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에너지의 공공성,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체제, 지속가능한 미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운동 진영과 환경운동 진영이 연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우리는 ‘이윤 논리와 시장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확장을 위한 연대’ ‘지속가능한 민주적 세계 구현을 위한 노동과 사회,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교류를 위해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에너지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행사,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미래 에너지 전망에 대한 비판, 에너지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며, 에너지 산업 민영화 이슈에 대한 연구 작업도 매년 이어갔다.⁶⁵⁾ 또한 2009년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이라는 연구도 기획하였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이어나갔다. 한국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적 가치를 가다듬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공공성의 핵심 내용은 탈시장화, 탈이윤화이다.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시장화, 상품화를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담겨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만으로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과제를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환경운동과의 토론을 통해서 에너지 공공성 개념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에너지 공공성에는 공공부문이 에너지를 탈시장화된 공공서비스로 제공해야 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참가단체들은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가 발표한 《저항하라, 탈환하라, 재건하라》를 검토하고, 에너지민주주의와 에너지 공공성이 아주 유사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체제의 전환이 노동자, 지역사회, 공공부문으로 권력이 이전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에너지 민주주의 개념의 아주 큰 장점이다. 에너지 공공성도 에너지 체제의 전환이 가능하기

65)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참여한 연구 작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소매도시가스 산업의 공공성 및 발전전략 수립》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 《발전 분할의 문제점과 통합적 전력산업 대안 모색》 《집단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공공적 발전방향 모색》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기본권》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과 비판 그리고 과제》 《사유화의 반면교사, 일본 가스산업 분석과 시사점》 《열에너지 국가정책 비판과 수도권 난방에너지의 공공적 대안》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에너지 공공성은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상을 만들지는 못했다. 공기업의 개혁을 포함하는 에너지 체제의 민주화의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3.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정체: 몇 가지 원인에 대한 평가

2005년 창립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최근 몇 년 동안은 다소 활동이 침체되었다. 여기서는 침체의 원인 몇 가지를 공유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첫째, 보수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 파괴, 배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정부와 사측은 2010년부터 시행한 타임오프제와 2011년부터 시행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였다. 그 결과 많은 노동조합이 노조 파괴에 맞선 투쟁에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가장 큰 참여 단체였던 발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크게 감소하고 소수노조가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에너지 공공성 사업은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둘째, 에너지 민영화 정책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한국 정부는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영화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민자 발전소의 비중이 약 15%로 늘어났으며, 천연가스 도입도 대기업에게 개방되고 늘어났다. 정부는 민간 자본에게 에너지 산업 진입을 허용한 후에 조금씩 확대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산업을 시장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거의 매년 가스 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여왔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투쟁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민영화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막아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노조의 활동이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민영화 이슈에 대응에 집중되면서 노조가 주도적으로 다른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다.

셋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의 싹튼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의 활동가들이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 공동참가단을 꾸려 참가하였다. 이 시기에 부상하던 세계적인 기후정의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2011년 5월에 기후정의연대가 출범하였다. 기후정의연대에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외에도 민주노총, 좌파 사회운동과 진보적 환경운동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 문제에 환경운동의 자원이 집중되었다. 한국에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활동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이슈의 변화는 기후운동을 침체시켰다. 또한 노동운동이 원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토론과 연대가 줄었다.

넷째,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한국의 몇몇 환경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였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기업이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논리였다. 몇 차례 토론이 있었으나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이 단체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사업에 참여도가 낮아졌다. 숨어있는 쟁점은 전력 산업의 전환과 관련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할 것인지, 현재의 공기업의 역할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전력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쟁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토론되지 않고 각 단체가 자기 현안과 자기 과제에 집중했다.

다섯째, 에너지 공공성과 기후정의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높지 않고,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기후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도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치고, 노조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도했으나 앞서 밝힌 이유들로 인하여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4. 앞으로의 과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한국의 중요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소중한 연대체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첫째, 우리가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에 참가한 것은 국제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흐름 속에서 자극을 받고 한국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에너지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투쟁 경험을 배우면서 한국의 운동이 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민영화를 막는 투쟁에 해외의 민영화 저지 사례, 민영화를 되돌린 사례, 민영화로 인한 피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민주주의네트워크에서 토론되는 다양한 이슈들은 한국에서 에너지 공공성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통해 민영화 저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

환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진보적인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기후정의연대를 통해서 대중적인 기후정의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번 회의 참가 직전에 한국에서 열린 간담회는 중단되었던 기후정의연대의 토론이 복원되는 계기가 되었다. 귀국 후에 이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갈 것이다.

셋째, 에너지 공공성과 기후정의를 노동조합의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당분간 정책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자료 제작에 도움을 받고, 공동의 정책 사업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에 있는 문제로, 사회 체제와 관련된 계급적인 이슈이다. 한국 사회에는 이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접근이 소개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입장 속에서 조합원을 교육하고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노동조합의 활동

1. 정부의 에너지 장기 전망에 대한 비판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이다. 고소득 국가들이 에너지 소비 증가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2000년 이후에도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연평균 3%나 되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매우 빈약하여, 96%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한다. 한국 정부는 5년 주기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이자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은 올해 1월에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존 정책 답습” “대기업 특혜와 에너지 민영화 확대”로 파악하고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⁶⁶⁾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전력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8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수요관리를 통해서 전력 수요를 전망보다 15%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수단으로 ‘가격 정책’을 중시해 두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산업구조의 개편’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등 중요한 과제는 빠졌다.

둘째,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6기 정도의 원전이 더 건설되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토론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확정한 것은 큰 문제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인 공기업의 수익성 위주 운영 탈피, 민주적 운영체제 수립,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의 내용은 모두 빠졌다.

셋째, 대기업 특혜와 에너지 민영화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그 수단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가발전 확대에서 찾고 있다. 대기업들은 민자 발전소에 특혜를 제공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활용하여 큰 이익을 거두고 있고, 발전소 건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전력 공급 불안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 계획에는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과 전력산업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진화는 한국 정부가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66) 성명서에 연명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당, 정의당

표현하는 방식이다.

넷째,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방안이 부실하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빠져있어 요금 인상 부담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섯째, 민주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민관 공동의 워킹그룹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선전했지만 워킹그룹에는 소수의 환경단체 정책전문가만 포함되었다. 노동자나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은 애초에 참가할 수가 없었다. 또한 워킹그룹의 토론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에너지 전망에 대한 비판이다.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환경단체 내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부족한 기구에 참여해서 보수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뿐이라는 주장과 이 기구에 참여해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라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워킹그룹 참여를 처음부터 반대했다.

2. 민영화 저지 투쟁 및 대안 정책 연구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민영화를 강요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 논리를 도입하여 인력을 감축시키고 노동 강도를 강화했다.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부설 연구소인 사회공공연구소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2010년 이후의 최근 연구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발전 분할의 문제점과 통합적 전력산업 대안 모색》(2010)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소들은 민영화 계획에 따라 6개의 자회사로 분할되고, 전력거래시장이 만들어졌다. 10년 동안 분할된 발전회사들이 경쟁을 벌인 결과 연료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도매전력가격이 상승했다. 인위적인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발전회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원을 감축했다. 또한 발전회사들은 자기 사업을 확대하고 이윤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본 연구는 분할된 발전회사가 한국전력으로 다시 통합되면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앨 수 있다고 보았

다. 나아가 노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을 펴는 데에 노동 조합과 환경단체가 개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공공적 발전방향 모색》(2010)

한국 가구의 13%에 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무척 높은 분산형 에너지 시설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공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려고 한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은 토지 무상 대여와 높은 계약 가격을 보장이라는 특혜와 함께 대기업에게 매각되었다. 반면 서울시가 소유한 집단에너지사업은 민간위탁의 실패로 3년 만에 운영권이 반환되었다가, 지금은 SH공사에 편입되었다. 본 연구는 민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서울시가 소유한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역에너지공사로 독립시키고, 이 공사가 서울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기본권 확대를 위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 그리고 과제》(2013)

한국 발전 설비용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원전 산업에도 비용 절감을 위한 압박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저가 자재 구매, 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정비 시장 개방, 인력 감축 등이 원전 시스템 내부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성의 원칙에 따라 원전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수원을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변화시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고,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이 필요하다.

《사유화의 반면교사, 일본 가스산업 분석과 시사점》(2014)

일본과 한국은 세계 1, 2위의 LNG 수입국이다. 그런데 일본의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한국의 약 3배에 달한다. 일본의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중 원료비는 60% 공급비는 40%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는 원료비 90%, 공급비 10%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가스 산업은 다수의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 체제로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연가스의 수입과 판매를 대기업에게 허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가스 민영화 정책은 일본과 같은 비효율과 요금 상승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열에너지 국가정책 비판과 수도권 난방에너지의 공공적 대안》(2014)

한국 정부는 수도권에 열 거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에너

지인 열을 거대 광역도시권에서 유통하고 판매한다는 발상은 애초에 잘못되었다. 이는 에너지 대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이다. 열 정책은 중앙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계획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에너지공기업을 통해서 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3. 기후정의운동에의 참여

한국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정책연구, 교육, COP참가단, 연대활동 등이 있었다.

2008년 한국발전노조가 발간한 《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 과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는 해외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보고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한국에 소개했다. 공공운수연맹.공공노조가 2009년 발간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과 탄소시장 정책을 비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민주노총이 2011년 발간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 노동의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한국 주요 업종의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COP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COP 대응 활동의 결과 한국에서 노동조합, 농민단체, 환경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후정의연대가 2011년에 결성되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0년 COP16 한국 노동조합 공동 대응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들의 기후부채 해결이 우선이다. 선진국들이 먼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지고 있는 기후부채를 갚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한국 노동조합은 기후정의를 위해 2010년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세계민중회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대응 정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변화에서 노동자,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주의이고 기술주의적인 ‘잘못된’ 해결책을 경계한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배출 감축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의 기술주의적 해결책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은 그 자체로 위험하거나 효과를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기후변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 체제의 전환이라는 ‘진짜’ 해결책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 정부는 우리의 역사적 책임에 걸맞는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누적배출량이 세계 22위에 도달하고 있으면서도 의무감축의 대상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한 결코 개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여섯째, 한국 정부는 그린워시에 불과한 녹색성장 정책들을 수정하고 무엇보다도 환경파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